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최저임금인상이 소상공인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소상공인 외식업 업종을 중심으로 -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스마트융합컨설팅학과

스마트융합컨설팅전공

최영채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상봉

최저임금인상이 소상공인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소상공인 외식업 업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act of Minimum Wage Increase on Small
Business Environment

- A Study on the Foodservice Industry of Small Business -

HANSUNG
UNIVERSITY

2021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스마트융합컨설팅학과

스마트융합컨설팅전공

최영채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상봉

최저임금인상이 소상공인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소상공인 외식업 업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act of Minimum Wage Increase on Small
Business Environment

– A Study on the Foodservice Industry of Small Business –

위 논문을 컨설팅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스마트융합컨설팅학과

스마트융합컨설팅전공

최영채

최영채의 컨설팅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1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김정렬 (인)

심사위원 유연우 (인)

심사위원 김상봉 (인)

국 문 초 록

최저임금인상이 소상공인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소상공인 외식업 업종을 중심으로 -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스마트융합컨설팅학과
스마트융합컨설팅전공
최영채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의 소상공인의 경영부진 및 코로나 19의 경제 불안정에 따른 자영업자의 높은 폐업률로 인해 불안정한 상황에 대한 불신의 시각이 높아지면서 여러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저수익 현상, 과도한 근로시간, 높은 물가 상승률 등이 주된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등의 영향도 있지만, 기존 창업 시장의 높은 자영업자 비율로 인한 과열 경쟁 문제, 대형 점포와의 경쟁, 원자재비의 상승 등은 언론에서 자주 다루는 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운영중인 사업주가 가장 많은 문제점으로 의견을 내놓은 것은 인건비이며, 최저임금은 자영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적 문제이다. 근로자의 수입 증가로 인한 근로자의 행복한 삶을 기대한 최저임금 인상률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이중적 결과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서 자리 잡고 있는 직원의 인건비는 영세 소상공인 및 사업자들의 입장에서 구인난에 직면하게 되고 1인 사업자로 운영하게 되며 이렇게 줄어드는 고용률로 인한 양극화가 뚜렷해지게 된다. 결국 2019년 5월 21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

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고용감축과 임금 구조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이 발생했다고 공식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저임금의 근로자들과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인 소상공인들이다. 현재 한국 경제에서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계층이다. 이는 중소기업들 중 77%의 높은 점유율이 5인 미만 소상공인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인상 이전부터 경영의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 높은 노동량 대비 낮은 생산성, 대기업과의 비효율적 거래, 동종업체와의 과열 경쟁, 자영업자 간 소득불균형, 경제 불황 인식에 따른 저가형 상품 판매 등 생계형 사업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 자체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외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현재 상태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각 정부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부 주도적 최저임금 정책의 효율적인 방안 수립 및 소상공인의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의 정책이 수립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국가 경제에 미치는 비중과 성장 동력 비중이 높은 경영 관리에 있어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은 고민은 키질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소규모로 운영되어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경제적인 인건비 비용에 대한 영향은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자영업자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 그에 타당한 체계적인 임금의 체계적인 조율이 매우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최저임금인상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와는 달리 1인 또는 5인 미만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양극화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계층은 더욱 증가한다.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주 본인의 노동력 투입으로 인해 수시로 변화되는 국가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의 부족 및 고용 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업체 운영의 어려움을 느끼고, 경영 악화로 인해 경쟁 양극화는 가속화 될 것으로 볼 때 정부의 적절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고,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업자 및 근로자의 상생을 위한 최

저임금 책정 방법론도 요구되고 있다.

국가 발전과 운영을 위해 소상공인의 생존은 대한민국 시민 경제의 중요한 바탕이다. 소상공인의 자립적 경제 활동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소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상황을 고려한 최저임금인상이 결정되어야 한다. 소상공인의 경영 현실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소상공인의 사업 경영에 따른 비용적 지출 비율을 고려하여 자영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야만 한다. 이로써 일방적인 주도 형태의 산업 구조 생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에 미치는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지원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며,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최저임금의 차별적 제안이 필요하며 소상공인 환경에 맞는 적절한 정책의 개발도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만으로 완전히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우며 앞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최저임금, 최저임금인상율, 소상공인 경영구조, 외식업 경영, 정부지원, 외식업 산업 구조, BOTG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1.1 연구의 배경	1
1.1.2 연구의 목적	3
1.2 연구의 방법과 구성	4
1.2.1 연구의 방법	4
1.2.2 연구의 구성	5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6
2.1 최저임금제의 이해와 시행	6
2.1.1 최저임금제의 목적과 이해	6
2.1.2 최저임금제의 시행과 발전	12
2.2 소상공인의 이해와 경영 현황	16
2.2.1 소상공인의 정의와 경제적 역할	16
2.2.2 소상공인의 현황과 경영 현황	19
2.2.3 외식산업의 이해와 경영 현황	26
2.3 최저임금제에 대한 선행 연구 및 조사 방법	34
 III. 연구 결과	 38
3.1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	38
3.1.1 최저임금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	38
3.1.2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기능적 효과	39
3.1.3 최저임금이 외식 산업에 미치는 영향	59

3.2 최저임금의 정책 개선 제언	70
IV. 결 론	74
4.1 연구 결과 요약	74
4.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안	76
참고문헌 및 DATA 자료	77
ABSTRACT	79



표 목 차

[표 2-1] 최저임금 제도의 장·단점	7
[표 2-2] 법정 근로 시간 환산표	9
[표 2-3]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분석 보고서	10
[표 2-4] 연도별 최저임금 미만율	11
[표 2-5] 최저임금의 시간/일급/월급/인상률 비교표	13
[표 2-6] 최저임금 인상률과 1인당 실질 국민소득 증가율 비교	13
[표 2-7] 주요국 최저임금 수준의 국제 비교	15
[표 2-8] 2022년도 노·사간 최저임금 인상 합의 내역	15
[표 2-9] 상시종업원 수에 따른 기업 형태의 분류	16
[표 2-10] 연도별 소상공인 사업체 수 추이	19
[표 2-11] 소상공인 업종별 세부업종 분류	20
[표 2-12] 소상공인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 현황	21
[표 2-13] 연도별 취업자 및 자영업자 추이	25
[표 2-14] 식품 접객업의 종류	26
[표 2-15]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수 및 외식업 산업체 수	27
[표 2-16] 전국 산업 사업체 종사자 수 및 외식 산업 종사자 수	28
[표 2-17] 음식점 및 주점업 전 규모 근로 부문 현황	30
[표 2-18] 취업자 및 고용률 전망	31
[표 2-19] 음식 서비스 분야 취업자 수 전망	32
[표 2-20] 최저임금 선행 연구 비교표	35
[표 2-21] 선행 연구와 본 연구 비교표	37
[표 3-1] 최저 임금 1만원 적용 대상 근로자 비중	38
[표 3-2] 2020년 중위 소득 비교표	40
[표 3-3] 연도별 중위 소득(명목, 실질)과 최저임금 비교	41
[표 3-4] 월평균 임금 인상률과 최저임금 비교	42
[표 3-5] 상대적 빈곤율과 최저임금 비교	43

[표 3-6] 소득 만족도와 최저임금 비교	44
[표 3-7] 소비 생활 만족도와 최저임금 비교	45
[표 3-8] 저임금 근로자 비율과 최저임금 비교	47
[표 3-9] 성별, 연령 집단별 일자리 만족도와 최저임금 비교	48
[표 3-10] 연령별 일자리 만족도와 최저임금 비교	49
[표 3-11] 성별 월간 근로 시간과 최저임금 비교	50
[표 3-12] 연령별 월간 근로 시간과 최저임금 비교	51
[표 3-13] 실업률과 최저임금 비교	52
[표 3-14] 고용률과 최저임금 비교	54
[표 3-15] 소비자 물가와 최저임금 비교	55
[표 3-16] BOTG를 활용한 최저임금 비교	56
[표 3-17]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최저임금 상승률 비교	57
[표 3-18]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업실적 변화	60
[표 3-19] 2010~2015 산업별 전체 폐업률	61
[표 3-20] 외식업 폐업률 및 고용 보험과 최저임금 비교	62
[표 3-21] 비대면 서비스 도입 후 고용 변화	64
[표 3-22] 음식점 무인주문기(키오스크) 사용 현황	65
[표 3-23] 프랜차이즈 형태별 무인주문기(키오스크) 사용 현황	66
[표 3-24] 매출액 규모별 무인주문기(키오스크) 사용 현황	67

그림 목차

[그림 2-1] 최저임금 위원회의 구성	8
[그림 2-2] 연도별 최저임금 미만율	11
[그림 2-3]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	12
[그림 2-4] 최저임금 인상률과 1인당 실질 국민소득 증가율 비교	14
[그림 2-5] 소상공인 사업체 수 추이	19
[그림 2-6] 소상공인 창업 및 폐업 현황	22
[그림 2-7] 소상공인 영업 비용 현황	23
[그림 2-8] 실업률과 고용률 변화 추이	24
[그림 2-9]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수 및 외식업 산업체 수	27
[그림 2-10]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 수 추이	28
[그림 2-11] 총 종사자 수와 외식업 종사자 수	29
[그림 2-12] 2017~2027 기간 증감 규모 기준 상위 10개 직종	32
[그림 2-13] 음식업 총 사업자 및 개/폐업 현황	33
[그림 2-14] 음식업 사업자의 개/폐업률 추이	33
[그림 3-1] 최저임금 1만원 적용시 대상 근로자 비중	39
[그림 3-2] 연도별 중위 소득(명목, 실질)과 최저임금 비교	41
[그림 3-3] 월평균 임금 인상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비교	42
[그림 3-4] 상대적 빈곤율과 최저임금 비교	43
[그림 3-5] 소득 만족도와 최저임금 비교	45
[그림 3-6] 소비 생활 만족도와 최저임금 비교	46
[그림 3-7] 저임금 근로자 비율과 최저임금 비교	47
[그림 3-8] 세계 주요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	47
[그림 3-9] 성별 일자리 만족도와 최저임금 비교	49
[그림 3-10] 연령별 일자리 만족도와 최저임금 비교	49
[그림 3-11] 성별 월간 근로 시간과 최저임금 비교	50
[그림 3-12] 연령별 근로 시간과 최저임금 비교	51
[그림 3-13] 실업률과 최저임금 비교	53

[그림 3-14] 고용률과 최저임금 비교	54
[그림 3-15] 소비자 물가와 최저임금 비교	55
[그림 3-16] BOTG를 활용한 최저임금 비교	56
[그림 3-17]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최저임금 상승률비교	58
[그림 3-18] 최저임금의 딜레마	59
[그림 3-19]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업 실적 변화	61
[그림 3-20] 외식업 폐업률 및 고용 보험과 최저임금 비교	62
[그림 3-21] 음식점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사용 증감률	66
[그림 3-22] 프랜차이즈 형태별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사용 증감률	67
[그림 3-23] 매출액 규모별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사용 증감률	68



I.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연구의 배경

최근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시대적 변화와 경제불황과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하여 영업 운영이 더욱 어려워진 외식 산업에 있어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점차 중요시 되고 있다. 외식 산업의 대부분은 소기업 특례업종으로 구분하고 있어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정에는 일부 제외되어 있지만, 외식 산업의 특성상 12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외식 산업 분야 특히, 한식 업종은 임금 이 높은 편은 아니라 근로 조건은 3D 업종이라 불릴 만큼 고강도의 노동 업무라 할 수 있다. 1988년도 1월부터 시행된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장과 사기진작을 통한 노동력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직접 노동 시장에 개입하면서 시작된 강제적 정책 제도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을 목표를 세운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가파른 인상률을 보이며 공표하고 있다. 실제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에 의해 2018년에 2019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2018년 대비 10.9% 인상되었다. 그러나 2020년 목표치인 ‘시간당 1만원’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률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 및 직원 고용에 따른 어려움으로 폐업자가 속출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시간당 1만원’ 정책을 고수하려 하였으나 코로나 19등의 영향과 소상공인의 반발로 2020년 8,590원(2019 대비 2.9% 인상)으로 인상하였고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2020 대비 1.5% 인상)으로 결정 공시하였다. 따라서 각계 관련 단체의 호소에 따른 업종별 차등 적용 및 제도적 조정 요구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줄이기 위해 목표액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지만 현시점에 형성된 최저임금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와 상가 임대료의 현실화, 각 지역별 골목상권 활성화, 외식업과 같은 소액결제 업종 카드수수료의 조정, 저금리 대출 지원등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안을 발표하였으나 기시행하고 있는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대기업과 소상공인간의 소득의 격차는 늘어가는 현실이다. 하지만 실제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해 소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 상황이며, 최저임금의 적정 기준을 ‘시간당 1만원’을 명시한 목표 이행보다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회생 정책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지원과 경영 컨설팅의 방법론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 2017년 1,060원이 오른 7,53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됨에 따라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은 ‘소상공인의 절망’이라는 표현으로 역효과가 나타났고,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라는 비정상적인 최저임금 인상률로 노동시장 임금을 무시하는 노·사간의 정치적인 협상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2019년 최저임금은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되어 소상공인의 고용 비용에 따른 경영난은 지속되고 있다. 이렇듯 가파른 최저임금은 2020년 2.9% 인상된 8,590원으로 소폭 인상되었으나 이미 형성된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구조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에 대한 소상공인의 명확한 이해와 현실적 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 최저임금의 미적용등이 꾸준히 논쟁이 되고 있음에도 뚜렷한 개선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해 결정된 최저임금의 결정 수준이 그해 물가상승률, 경제상승률 등 종합적인 요소가 적용되었는가와 사회적 환경, 정치적 환경등과 함께 실제 적용된 최저임금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비교하면 그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결국 비정규직의 증가와 저수익 또는 손익분기점 이하의 경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증가로 인한 소득 양극화는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최저임금제도의 미실행 기업의 강력한 처벌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주들은 경영 악화에 따른 현실성 도피로 청년, 비정규직, 여성 등 취약 계층에 대해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으로 법을 피해 가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1988년 이래 최저임금제도가 실행된 후 이 제도의 운용이 초기 궁극적인 목표가 실행되고 있는지에 의문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최저 임금제도로 인해 소상공인의 운영 현실의 변화와 고용 직원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2022년에 적용할 최저 임금안 (9,160원, 5.1%)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제도가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현상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전략 등의 수립과 대책 그리고 고용에 대한 안정적 법적 절차 운영에 대한 컨설팅 방법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모든 소상공인 사업자들이 안정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최저임금제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과 고용근로자 모두 발전적인 방향성 모색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최저임금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이에 따른 자영업 소상공인의 산업 형태에 맞는 적정서의 최저임금 정책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1.1.2 연구의 목적

최근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산업 구조는 지속적인 환경 변화와 경기 불황과 최저임금 인상등으로 인하여 기업경영이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다. 특히 외식 기업의 경우 1인 운영 또는 10명 이하의 적은 인력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점포 운영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점차 요구되고 있다. IMF 이후 실직자 증가에 따른 예비 창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 자영업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각 지자체 등 각 기관에서 예비 창업자 및 기존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적극적인 창업 지원에 따른 자영업자의 증가와 함께 경쟁 업체의 증가, 대형 프랜차이즈의 증가와 실직등으로 인한 퇴직자의 창업 시장 신규 진입, 특히 진입 장벽이 낮은 외식 산업에 진입함으로써 자영업 시장의 경쟁 포화 상태로 이어지면서 자영업 시장은 수익성은 떨어지기 시작했다. 또한 사회적 변수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시행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 시장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되어 왔다. 사회적 변수에 따른 자영업 시장의 환경은 변화되고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은 폐업으로 이어지고 현재 폐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자영업 시장에서 생명력을 높이고, 폐업률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경영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영업 시장의 전체적인 산업 구조에 대해 분석하여 컨설팅 진행에 따른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최저임금에 따른 인건비 등의 비용적 측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 개선에 대한 제언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특성을 분석하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실행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소상공인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와 경기 불황에 대한 인식 정도와 실질적 자영업 시장의 소비 규모를 비교하여 실질 자영업 시장 경제 현황을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최저임금의 인상률과 물가 상승률을 비교하여 임금의 실질 비용에 대한 증감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한국과 세계 주요국의 최저임금 비교를 통해 국내 최저임금에 대한 적정 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최저임금과 인상분에 대한 근로자 만족도와 소상공인의 운영 형태를 분석하고 그 형태에 따른 산업 구조를 변화와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섯째, 분석된 실증연구 결과를 통해 최저임금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과 구성

1.2.1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다양한 소상공인 업태 중 외식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자영업 시장의 환경 및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실증적 연구 방법과 선행 논문의 문헌 연구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첫째. 선행 연구의 문헌연구는 노동법, 산업 연관표,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과 고용효과, 최저임금과 통상임금과의 관계등을 통해 최저 임금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고찰하였다.

둘째.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 제도등에 대하여 선행 논문과 국내외 학술지 및 간행물 등의 조사와 분석,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셋째. 실증분석을 위해 선행 연구를 통한 환경 속성을 도출하고 최저임금과

물가 상승률을 비교하여 실질 임금의 시간적 비용을 산출 비교 분석하였다.

넷째. 기존 통계 수치 자료를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인한 근로자와 소상공인 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저임금 영향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다섯째. DATA 자료에 의해 도출된 분석에 대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점검과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 분석 정리하였다.

여섯째. 실증 분석을 통한 도출 된 현황에 대해 최저임금의 효율적 개선 방향에 대하여 연구 고찰 하였다.

1.2.2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총 4개의 장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연구의 목적, 연구의 방법과 연구의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본 연구의 서론을 구성하였다.

제2장 본론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최저임금제의 목적과 이해, 최저임금의 시행과 발전과정 및 관련 법규, 소상공인의 이해, 소상공인의 현황,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 현황등에 대한 고찰과 이론적 배경을 통해 최저임금과 실질 물가와의 비교, 최저임금과 통상임금과의 비교등을 통한 최저임금이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제3장 연구결과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을 통해 최저임금이 소상공인 근로자 및 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외식 산업에 미친 영향을 중점으로 현황 분석하였다.

제4장 결론에서는 상기 도출된 현황에 대해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을 알아보고,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2.1 최저임금제의 이해와 시행

2.1.1 최저임금제의 목적과 이해

2.1.1.1 최저임금의 목적

최저임금제란 정부가 회사와 근로자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정책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저임금으로 노동을 착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저 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용 근로자에게 최저의 금액을 정하고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정한 법적인 시행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의 원칙적 기대 효과는 근로자에게 적정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켜 근로자의 빈곤 생활을 없애고, 소득 재분배를 이루는 데 있다. 이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아닌 사업주의 사업체 운영 비용과 관련되기 때문에 복지정책보다는 시장규제로 볼 수 있다. 한국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로써 규정되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노동력의 대가인 비용의 목적으로 본래 사업주와 근로자 쌍방의 근로계약 또는 단체 협약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견으로 결정돼야만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와 근로자는 동등한 협상 관계가 형성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서 임금 결정을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에만 위임할 경우 여성·청년·비정규직과 같은 일부 취약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적정 급여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 또한 노동 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의 근로자들은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 임금이 적정 수준에 결정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최저임금의 가장 근본적인 효과는 ‘적정 임금으로 근로자를 보호 한다’ 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이 고용과 근로자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나 최저임금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도 있

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관한 효과를 연구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데이비드 노이마크’는 최저임금제의 장단점을 [표 2-1]과 같이 정리했다.

[표 2-1] 최저임금제도의 장·단점

장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저숙련 근로자들은 기존보다 높은 임금도 가능‘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실직과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결과도 있음미국의 일부 도시에서 시행한 임금정책은 빈곤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단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일부 나라에서 높은 최저임금은 일자리가 축소된다는 근거 제시저숙련 근로자를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는 최저임금이 그들의 고용이 감소된다는 강력한 근거를 제시함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숙련도를 요구하는 저임금 일자리가 줄어들 확률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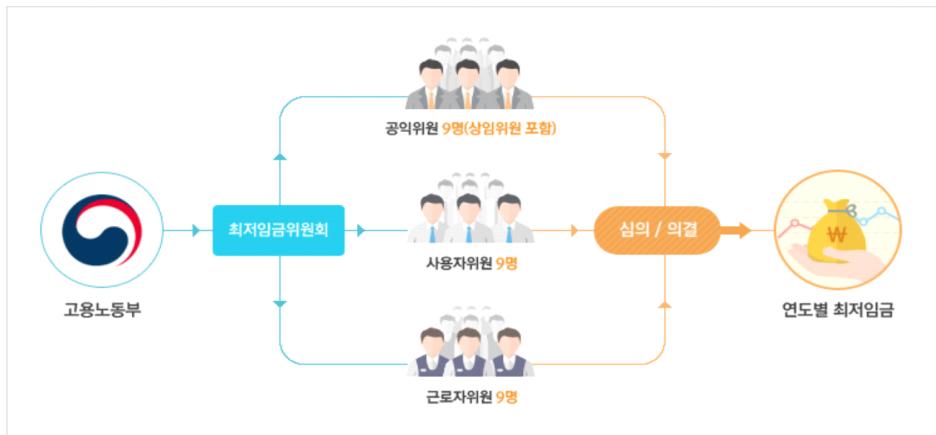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글로벌 사회정책 브리프)

2.1.1.2 최저임금제의 이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12조를 바탕으로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 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와 의결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최저임금위원회, 2021).

최저 임금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기초자료 준비(분석 및 제공), 임금실태조사 자료 분석,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미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분석,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사업장 현장 방문 실시, 외국의 최저임금 제도 관련 자료수집 등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의 실질적 결정 단체는 최저임금위원회이다.

[그림 2-1]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2021)

하지만 최저임금 설정 단계에서 노동부 장관이 심의요청 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90일 이내에 심의 및 의결하여 최종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안에 근거하여 공표한다.

2.1.1.3 최저임금제의 적용

사업주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 기준 대비 저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과의 비교를 위해선 임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임금의 총액을 최저임금과 같은 기준으로 환산하여 비교한다(최저임금위원회, 2021).

근로자가 최저임금제에 적용된 임금을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실지급액 중에서 최저임금의 범위에 산입하지 않는 바용은 제외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서는 근로자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 근로 임금의 범위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산입하지 않는 임금·수당 외에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임금 또는 수당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임금의 범위에 산입해야 한다.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법 제6조 제4항과 시행규칙에서 규정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받는 임금에서 격월·분기별 정기상여금, 숙박비·식비 등 복리후생 수당이 제외되어 있었으나 2018년 법 개정(19.1.1 시행)을 통해 산입범위가 일부 조정되었다.

최저임금의 범위에 관한 논란은 오히려 주휴수당을 둘러싸고 심화되는 양상이다. '18년에 단행된 시행령 개정에는 기존에 행정해석을 근거로 지급하였던 주휴수당과 관련 최저임금의 산정에 있어 실근로시간이 아닌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는 최저임금액은 월/ 주/ 일 또는 시간 단위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월/ 주 또는 일을 단위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경우 시간급으로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법 제5조 제1항) 이는 시간·일·주 또는 월이라는 기간 단위 간에 상호 환산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일·주 또는 월을 시간으로 따졌을 경우 몇 시간으로 환산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환산한 결과 아래의 [표 2-2]와 같다.

[표 2-2] 법정 근로 시간 환산표

구 분	1시간	1일(日)	1주(週)	1월(月)
1 시간	0	1~8	1~40	1~209
1 일(日)	8	0	1~5	1~21.75
1 주(週)	40	5	0	1~4.35
1 월(月)	209	21.75	4.35	0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2021) 연구자 재편집

2.1.1.4 최저임금 결정 근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있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법제4조 제1항). 이러한 척도들이 최저임금 결정근거로 활용하는데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근로자의 생계비를 근거로 최저임금의 결정을 위해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생계비 측정의 ‘정확성’이다.

둘째, 생계비 수준의 ‘적정성’이다.

물론 최저임금제도가 근로자의 최소한의 경제적 보전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생계비가 적정치 않다면 이는 시장에 대한 규제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최저임금을 통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매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비혼 단신 근로자의 실태생계비’를 산출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근로자 측인 양대 노총에서도 매년 ‘표준생계비’를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다. 해당 자료들을 살펴본 결과, 공통적으로 ‘주거·수도·광열’에 지출되는 비용이 전체의 약 1/4 수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3]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분석 보고서

구 분	평 균 (원)	표준 오차(명) (Standard Error)	상대표준 오차(RSE)
2018년 연간 (819명)	소 득	2,133,898	51.568
	근로소득	2,029,467	52.493
	실태생계비	2,014,955	37.078
	소비지출	1,686,439	31.269
	비소비지출	328,516	12.494
2019년 연간 (1,665명)	소 득	2,711,719	53.287
	근로소득	2,492,696	49.278
	실태생계비	2,184,538	50.134
	소비지출	1,814,982	41.722
	비소비지출	376,071	13.538
2020년 연간 (2,219명)	소 득	2,803,091	39.668
	근로소득	2,571,963	39.611
	실태생계비	2,084,332	29.961
	소비지출	1,705,594	23.177
	비소비지출	378,738	11.917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2021)

2.1.1.5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미만율의 이해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에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대한 준수 여부는 임금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급이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판단한다. 2018년부터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자 중 수습근로자는 단순 노무 업무가 아닌 자로 한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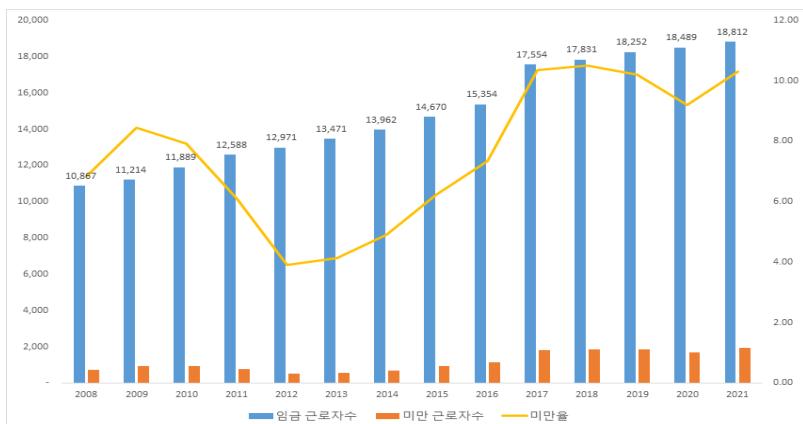
[그림 2-2]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판단 시 이용되는 최저임금 미만율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 활동 인구조사에서는 전체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임금을 총 근로 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 조사 사업체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본 급여와 통상수당의 합을 근로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표 2-4] 연도별 최저임금 미만율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임금 근로자수	10,867	11,214	11,889	12,588	12,971	13,471	13,962	14,670	15,354	17,554	17,831	18,252	18,489	18,812
미만 근로자수	744	947	941	767	506	558	687	915	1,126	1,817	1,874	1,865	1,700	1,941
미만율	6.85	8.44	7.91	6.09	3.90	4.14	4.92	6.24	7.33	10.35	10.51	10.22	9.19	10.32

자료 :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21) 연구자 재편집

[그림 2-2] 연도별 최저임금 미만율



자료 :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21) 연구자 재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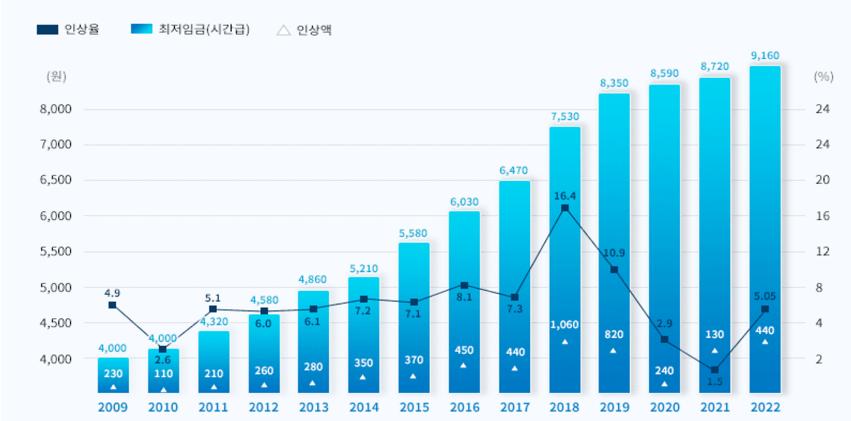
2.1.2 최저임금제의 시행과 발전

2.1.2.1 최저임금제의 시행 및 인상률

우리나라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헌법적 근거를 두고 규정되어있다. 근로기준법을 1953년 제정함으로써 제34조와 제35조는 최저임금제의 시행에 근거를 두었으나, 예상보다 최저임금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고, 근로자의 임금 수준의 보호와 함께 저임금의 제도적 해소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도가 정식으로 시행되었고, 2001년 이후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대체로 소득증가율과 비슷하게 변동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인상비율은 당시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입 이후부터 1998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평균 11.9%가 상승하였으며,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11.8% 상승하였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6.4% 상승률로 이전에 비해 하락하였다.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2001년 6.56% 이후 대폭 인상으로 16.38%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달성하였다.

[그림 2-3]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2021)

[표 2-5] 최저임금의 시간/일급/월급/인상률 비교표

연도	시간급	일급 (일 8시간 기준)	월급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인상률(%)
2010년	4,110원	32,880원	858,990원	2.75
2011년	4,320원	34,560원	902,880원	5.1
2012년	4,580원	36,640원	957,220원	6.0
2013년	4,860원	38,880원	1,015,740원	6.1
2014년	5,210원	41,680원	1,088,890원	7.2
2015년	5,580원	44,640원	1,166,220원	7.1
2016년	6,030원	48,240원	1,260,270원	8.1
2017년	6,470원	51,760원	1,352,230원	7.3
2018년	7,530원	60,240원	1,573,770원	16.4
2019년	8,350원	66,800원	1,745,150원	10.9
2020년	8,590원	68,720원	1,795,310원	2.9
2021년	8,720원	69,760원	1,822,480원	1.5
2022년	9,160원	73,280원	1,914,440원	5.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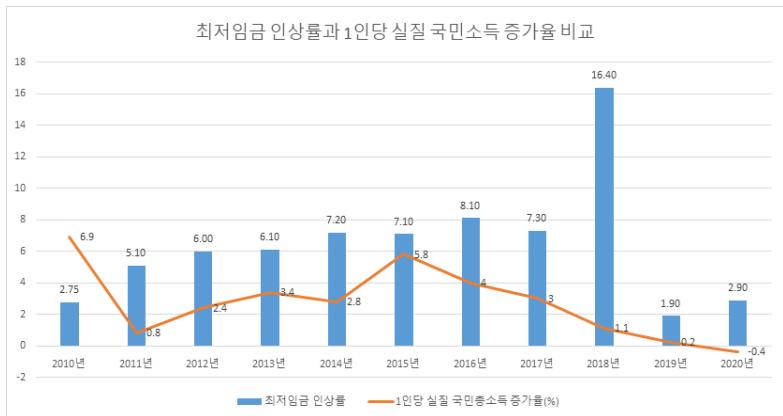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2021) 연구자 재편집

[표 2-6] 최저임금 인상률과 1인당 실질 국민소득 증가율 비교

연간 지표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	2.75	5.1	6	6.1	7.2	7.1	8.1	7.3	16.4	1.9	2.9
1인당 실질 국민총 소득 증가율(%)	6.9	0.8	2.4	3.4	2.8	5.8	4	3	1.1	0.2	-0.4

자료 : (통계청, 2020) 연구자 재편집

[그림 2-4] 최저임금 인상률과 1인당 실질 국민소득 증가율 비교



자료 : (통계청, 2020) 연구자 재편집

2.1.2.2 최저임금의 국내외 비교

OECD 30개국 중 한국이 시행하게 된 1998년에는 최저임금을 도입한 곳이 17개국에 불과했으나 2016년 이후에는 27개국(총35개국 중)이 시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OECD 협력 파트너 국가인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와 OECD 가입을 희망하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리투아니아도 법정 최저임금을 도입하였다.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책정할 경우 산업 분야 및 직업 특성에 따른 최저임금의 차등 지급과 협약 당사자의 자율성이 중시되는데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을 통한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다양한 최저임금의 공존으로 기업의 시행률이 떨어질 수 있으며 강제 집행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2015년에 독일은 법정 최저임금을 도입하였으면, 이탈리아 및 스위스도 법정 최저임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률은 2000년 이후 기준 연도의 소득증가율보다 높은 형태(연평균 4.8% 포인트 높은 성장률)이며, 최저임금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대비 2013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2016년 중위소득 대비 50.4%로 OECD 31개국 중 17위이며, OECD 최하위권에서 탈피하여 중위권으로 진입하였다. 2015년 구매력지수(PPP)에 의해 변환된 최저임금은 2000년 2.40달러에서 2016년

5.80달러로 상승하였고, 이는 OECD 평균인 6.08달러보다 다소 낮으며 OECD 32개국 중 16번째이다.

[표 2-7] 주요국 최저임금 수준의 국제 비교

한국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캐나다	영국	OECD평균
62.7	31.6	44.0	53.6	61.5	51.2	55.2	54.4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활동보고서, 2019)

2.1.2.3 2022년 최저임금 안 결정 고시 (2021. 08. 05)

2021년 07월 12일 노·사·공의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이 제시한 금액을 4차에 걸쳐 조율하고 최종 공의측이 제시한 금액(9,610원, 전년 대비 5.05%)을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0명으로 결정하였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때마다 노·사간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아 2022년도 최저임금은 공의측의 제안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경제 정책 수립에 노·사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방식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으나 국가의 경제 정책에 어느 한 분야에게 유리한 조건이 강하게 제시되고 쌍방이 제시한 조건으로 합의된다는 방식은 일방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2022년도 최저임금이 공의측이 제시한 금액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의미는 중요하다.

[표 2-8] 2022년도 노·사간 최저임금 인상 합의 내역

구 분	2021년 최저임금액	2022년 최저임금 제시(안)				2022년 최저임금액 (결정)
		최초	제2차	제3차	제4차	
근로자위원	8,720원 (1.5%)	10,800 (23.9%)	10,440 (19.7%)	10,320 (18.3%)	10,000 (14.7%)	9,160 (5.05%) (△440)
사용자위원		8,720 (0%)	8,740 (0.2%)	8,810 (1.0%)	8,850 (1.49%)	
공 익 측		-			9,610 (5.05%)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2021) 연구자 재편집 () 전년대비 인상률 (단위 : 시급, 원)

2.2 소상공인의 이해와 경영 현황

2.2.1 소상공인의 정의와 경제적 역할

2.2.1.1 소상공인의 정의 및 특성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나 생활형 사업을 가지는 자영업자들을 지칭하며 숙박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광업, 운수업, 광업 등의 사업자를 말한다(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 2조).

[표 2-9] 상시종업원 수에 따른 기업형태의 분류

제조 · 건설 · 광업 · 운수	소 상 공 인		소 기 업	중 소 업
기타 업종	소상공인	소 기 업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5인	10인	50인	300인

자료 : (소상공인진흥원, 2021)

소상공인은 1~9명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의 성격을 가지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자영업자는 '자기 혼자 또는 무급·유급 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정의되고 있다(홍충기·박정구, 2008). 위의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으며, 소기업들중에서도 규모가 매우 작은 기업들을 일컫는다. 따라서 제조, 건설, 운수업, 광업을 제외한 업종들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하로 운영하는 소기업들로 이러한 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에 비해 규모 경제의 문제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로 인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현재 소상공인들의 점포가 굉장히 높은 비율로 시장 경제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국가가 보호하고 키워야 한다(권근희, 2016). 현재는 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소기

업과 중기업을 구분하고 있으며 1999년 2월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설립하면서 소상공인을 별도로 구분하게 되었다(이용관, 2016). “소상공인”이라는 용어는 2000년 12월 29일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 5314호)으로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소기업 지원계획 수립방법 및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방법 등이 제정되어 법적으로 “소상공인”이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되었다(소상공인진흥원, 2000). 2015년 1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사항들을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에 따라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안정 및 성장 등을 위한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을 정하여 현행 제도상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게 되었다(이용관, 2016). 소상공인의 적용 범위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규정한다.

외국의 소상공인의 정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기준과 많은 부분이 유사하며 각국의 소상공인 정의를 살펴보면 미국은 소상공인 범위를 고용주 포함 5인 미만의 개인 사업체, 파트너쉽, 법인기업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종업원 5인 미만으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일정 매출액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홍순창, 2017). 이와 다르게 중국은 근로자 수 100인-200인 기준으로 광범위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하로 정의하고 있다(소상공인진흥원, 2010).

2.2.1.2 소상공인의 경제적 역할

국내 경제의 부진은 자영업자인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만들고 소상공인들의 영업 부진에 따른 국내 경기 침체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실업자 증가, 소상공인의 가계 부채 상환 능력 약화 등으로 소비와 지출이 축소됨에 따라 금융권 부실도 커질 수 있다. 소상공인은 이제 한국 경제에 있어서 매우 큰 비중과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전체 사업체 가운데 87%가 소상공인으로

써 전체 근로자의 38%를 차지하며 경제의 맨 끝단에서 인력과 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중계 역할을 한다(매경이코노미, 2015).

소상공인의 업종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한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소상공인의 자립 경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먼저, 소상공인은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일상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제 활동의 장으로서 생산과 고용의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이병구, 2010). 소상공인은 하부 경제를 조성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생산과 분배 기능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기업, 중소기업과 함께 국가 경제의 기본 시스템을 구성한다(홍순창, 2017). 다음으로, 창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소상공인은 왕성한 기업가 정신과 창의력을 지닌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생계 수단으로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생계 수단으로서 창업을 하는 경우에 소상공인은 자영업자 형태로 사업 활동을 영위한다(김순환, 2013). 그리고 소상공인은 전국에 분포되어 그 자신이 위치해 있는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며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전문적 기술이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로 사회에서 필요한 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이병구, 2010),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은 다양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효과적이다. 현대사회는 소비자의 수요와 요구가 다양성이 함께 존재하는 개인 개성화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김순환, 2013).

2.2.2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 현황

2.2.2.1 소상공인의 사업체 현황

국내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2019년도 자료 기준으로 전체 약 3,874천개 사업체 중 3,285천개로 총 사업체 대비 84.8%로 전년 대비 0.1% 하락하였고, 종사자 수는 전체 17,934천명 중 6,617천명으로 전체 종사자수 대비 36.9%의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0.6% 증가하였다. IMF 이후 생계형 창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총 사업체수 중 소상공인 사업체의 비중이 84.8%이나 종사자 수 대비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36.9%로 낮은 고용률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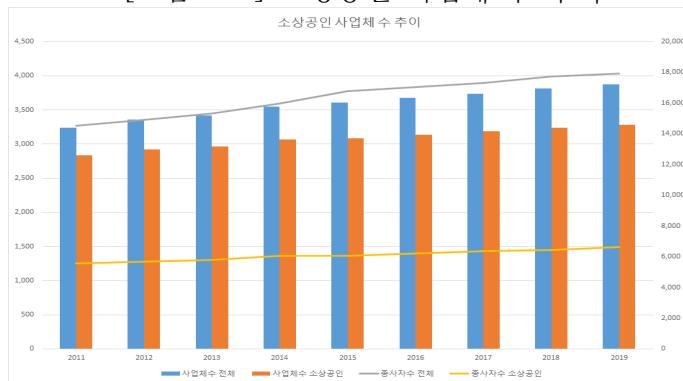
[표 2-10] 연도별 소상공인 사업체 수 추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 체수	전체	3,235	3,354	3,419	3,545	3,605	3,676	3,737	3,813	3,874
	소상공인	2,835	2,919	2,962	3,063	3,084	3,137	3,188	3,236	3,285
	(비중.%)	87.6	87.0	86.6	86.4	85.6	85.3	85.3	84.9	84.8
종사 자수	전체	14,534	14,891	15,345	15,962	16,775	17,051	17,294	17,711	17,934
	소상공인	5,549	5,677	5,778	6,046	6,066	6,202	6,365	6,424	6,617
	(비중.%)	38.2	38.1	37.7	37.9	36.2	36.4	36.8	36.3	36.9

자료 : (통계청 - 전국사업체조사, 2021) 연구자 재편집

(단위 : 천개, 천명, %)

[그림 2-5] 소상공인 사업체 수 추이



자료 : (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 2021) 연구자 재편집

2019년 기준으로 소상공인은 약 323만개 업체로 전체 소상공인 사업체 수에 662만 명이 종사하여 서민 경제의 바탕이 되고 있다. 소상공인을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업이 58만개, 도소매업이 79만개, 개인서비스업이 35만개, 운수업이 34만개등의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소상공인 사업체 중 도소매업은 24%, 숙박/음식업은 20%, 개인서비스업은 12.3%, 운수업은 11.7%, 제조업은 9.2%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11] 소상공인 업종별 세부 업종 분류

업종명	세부업종
도·소매업	농·축산 판매업, 편의점, 의류판매업, 통신·가전 판매업 등
요식업	한식, 중식, 제과점, 주점, 분식 등
수리 및 제조업	자동차 수리 등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등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의 업종별 사업체 비중 조사 결과 음식 및 숙박업, 도·소매업등 특정 업종에 집중되어 있으며, 1~4인 사업체 수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소상공인 업체의 형태는 92.4%가 개인형이고, 사업장 소유 형태는 보증형 월세가 35.0%, 월세가 39.0%, 자가형이 27% 순이며, 평균 영업 기간은 9.5년이다.

고객 수의 증감은 ‘감소’가 70.3%, ‘증가’ 8.3%이며, 주된 경쟁 상대는 ‘주변의 소형업체’ 41.3%, ‘주변의 대형 업체’가 25.1%, ‘특별히 없다’가 28.8%이며, 월평균 매출액은 995.만원이며, ‘감소’가 71.%, ‘증가’ 7.4%이며, 월평균 순이익은 148만원으로 ‘감소’가 73.5%, ‘증가’ 6.0%로 나타났다.

자영업을 하게 된 동기는 ‘생계유지’가 80.3%이며, 창업 준비 시간은 ‘3-6개월 미만’이 23.%, ‘1-3개월 미만’이 23.1%로 창업 준비 시간이 짧았으며, 창업 시 애로사항으로는 ‘자금조달’이 54.1%, ‘입지선정’이 43.2%으로 나타났다. 평균 창업 비용은 6,580만원이며, 자기 자본 비율이 평균 74.9%이며, 창

업 정보 습득 방법은 ‘친인척/친구 등’이 41.7%, ‘얻은 경험 없다’가 34.8%로 창업 정보 채널이 부족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표 2-12] 소상공인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 현황

산업별	종사자 규모별	2010		2015		2017		2018		2019	
		사업체 수 (천개)	종사자 수 (천명)	사업체 수 (천개)	종사자 수 (천명)	사업체 수 (천개)	종사자 수 (천명)	사업체수 (천개)	종사자수 (천명)	사업체수 (천개)	종사자수 (천명)
전체 산업	계	3,229	8,810	3,727	10,596	3,872	11,190	4,103	22,234	4,176	22,723
	1~4명	2,804	5,075	3,125	5,601	3,228	5,847	3,274	5,878	3,322	6,041
	5~9명	283	1,841	434	2,770	466	2,989	491	3,157	511	3,239
제조업	계	307	1,256	395	1,591	398	1,652	437	4,105	440	4,123
	1~4명	222	466	277	574	275	583	276	578	277	584
	5~9명	53	357	83	551	89	604	91	620	92	624
도.소 매	계	861	2,055	998	2,451	1,009	2,508	1,027	3,250	1,028	3,289
	1~4명	786	1,436	892	1,621	897	1,644	893	1,624	892	1,651
	5~9명	55	353	82	512	88	546	93	581	94	586
숙박 및 음식	계	632	1,595	704	1,898	743	2,029	766	2,326	785	2,384
	1~4명	583	1,221	617	1,264	649	1,366	656	1,372	668	1,416
	5~9명	39	249	73	454	80	489	87	540	94	560

자료 : (통계청, 2021) 연구자 재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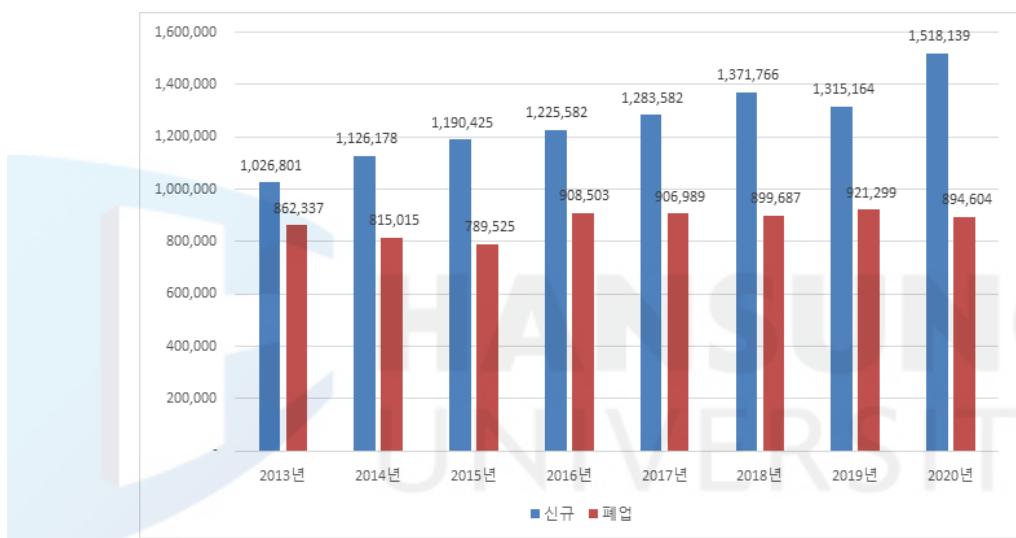
소상공인의 총 사업체 4,171천개(2019년 기준) 중 도소매업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2위 숙박 음식, 3위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위 운수업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른 종사자 수는 사업체 수 대비 보수 현황 순위는 도소매업이 가장 많으며 2위는 숙박 음식업, 3위는 제조업, 4위는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조사 되었다.

사업체 수 대비 종사자 수는 어느 정도 일정 비율로 조사 되었으나 1인당 보수와 영업이익은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와 관계없이 특수직 위주의 조사자로 형성되는 양상이 조사되었다. 특히 숙박 음식업의 경우 총 18개 업종 중 1인당 보수는 최하위이고 1인당 영업이익은 15위에 조사되었다.

2.2.2.2 소상공인의 창. 폐업 구조

소상공인의 창업과 폐업 현황을 살펴보면 생계형 업종을 중심으로 창업과 폐업이 빈번히 발생하고, 창업기업의 생존율도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소상공인 창업은 연평균 75만개, 폐업은 67만개로 이중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이 전체 신생기업의 48%와 소멸 기업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6] 소상공인 창업 및 폐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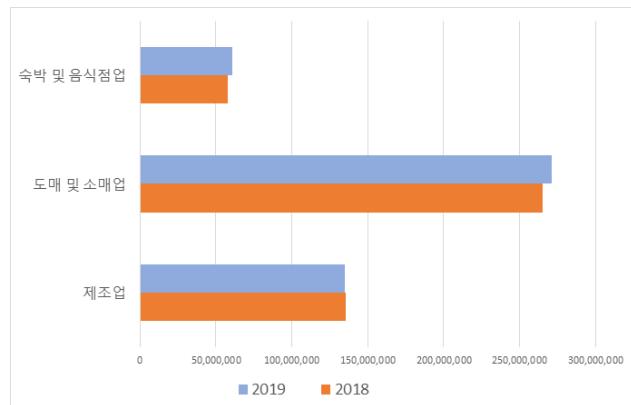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21) 연구자 재편집

창업 후 5년까지의 생존율은 평균 29%('13년)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전체 소상공인 매출은 517조원으로 최근 11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영업이익률이 정체되고 있어 전체적인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다.

창업 소요비용은 2007년 6,570만원에서 2016년 7,354만원으로 과거 대비 증가하였으며, 영업 비용도 증가했다. 영업 비용은 재료비(62%), 인건비(16%), 세금(11%), 임차료(11%) 등으로 구성되는데, 임차 소상공인 비율이 높은 비율에서 평균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그림 2-7] 소상공인 영업 비용 현황



자료 : (국세청-국세통계,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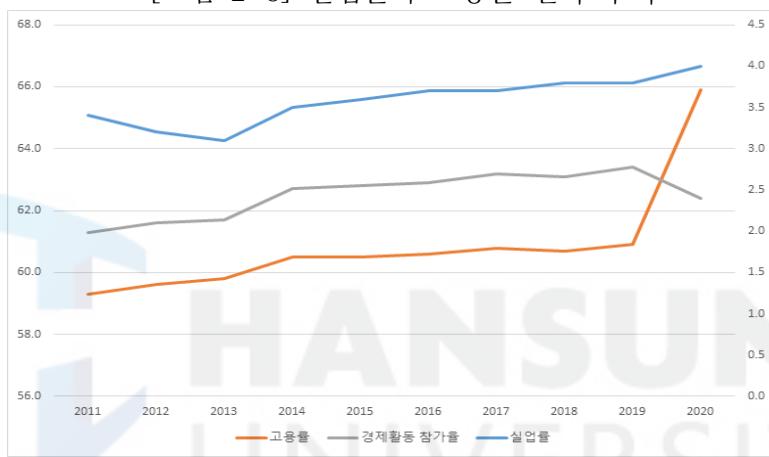
2015년부터 연속적으로 감소하였던 자영업자 수는 2016년 8만명 이상의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년 동월 기준으로는 각각 7만9천명, 8만6천명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급격하게 창업자가 늘어나기 시작하여 경기침체 장기화와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었다. 이때 사상 최악의 고용 대란이 현실화 되었으며 중·장년층은 물론 청년층까지 생계형 창업에 뛰어들었으며 또한 2012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최대 18만명, 2016년 10만명 이상이 줄었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창업자들의 생존이 어려워지면서 자연스럽게 폐업 시장으로 몰리게 되었다(김범식, 2013). 2005-2014년까지 개인 사업자의 창업과 폐업 수는 창업 969만개, 폐업 798만개로 성공률 17.4%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자영업 성공률이 21%도 되지 못한 수치였다. 창업 기간에 따른 폐업률은 1년-3년 미만 38.6%, 4년-5년 미만 29.3%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를 통해 평균 영업 기간이 3년으로 창업과 폐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계부채가 임계점에 도달한 상태에서 추가로 자금 대출로 창업을 하지만 통계적으로 80% 이상은 실패하기 때문에 그 후유증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헤럴드 경제, 2016).

2.2.2.3 실업률과 자영업 비중 간에 관계

고용률은 취업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이지만, 실업률은 취업을 희망하여도 취

업을 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하지만 공식 실업률이 실업 상태를 나타내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나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하고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표이다. 2018년 실업률은 3.9%로 2017년보다 0.2%p 증가하였다. 2013년 3.2%에서 증가 추세에 있다. 고용률이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만 실업률은 2018년 남자 3.8%, 여자 3.6%로 남자가 약간 높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국민 삶의 질, 2019).

[그림 2-8] 실업률과 고용률 변화 추이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21)

보통 한 나라의 실업률은 그 국가의 경기 상황과 성장률, 취업, 고용등과 관련되며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가 발전함과 동시에 보통 고용률은 증가 하지만 이에 따른 불평등은 함께 생기게 된다.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실업률은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소상공인들이 증가하여 생계형 창업자 늘면서 자영업 규모가 영세화된다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2.2.2.4 자영업자의 증가

2011년 이후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자는 2019년까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는 전년 대비 3.5% 증가하여 1,550천명에 달하였으

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3,941천명으로 2.1% 증가하였다. 실업률을 낮추는 역할에 따른 자영업 증가의 창업자를 살펴보면,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 층, 50대 이상 고령층, 남성 등이 증가하고 있다.

사업체 특성에 따라 취업자 증가율이 높은 부분을 확인해 보면 경쟁 강도가 높고 마진이 적은 생계형 사업, 단순 기술 종사자, 1~4인 규모의 영세 사업체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자영업 증가속도는 건설업 10.5%,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 6.3%이며, 서비스종사자가 9.1%, 판매 종사자는 5.3%, 단순노무직 12.0% 등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매우 높은 비중(92.3%)이 1~4인의 소규모 사업체 근무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

[표 2-13] 연도별 취업자 및 자영업자 추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취업자	24,033	24,527	24,955	25,298	25,897	26,178	26,409	26,725	26,822
자영업자	5,643	5,657	5,768	5,704	5,720	5,622	5,614	5,682	5,638
비중	23.5	23.1	23.1	22.6	22.1	21.5	21.3	21.3	21

자료 : (통계청, 2020)

(단위 : 천개, 천명, %)

또한 평생 직장의 개념과 인식이 바뀌면서 창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창업인구 연령대는 점차 낮아지고 창업을 마지막 탈출구로 생각하여 창업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현실과 이론적인 측면에서 현재 환경에 직면한 위험한 현상이 된다(홍순창, 2017).

창업 성공률 20% 이하라는 현실성을 고려할 때, 무리한 창업은 가정과 사회, 국가적으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철저한 준비를 통해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10년 대계를 완성할 전략이 되어야 한다(홍순창, 2017).

국내 자영업자 비중은 28.2%로 OECD 평균(15.8%)에 비해 높은 편이다. 미국 (6.9%)이나 일본(11.7%)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2~4배 수준으로 제한된 내수 시장에서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래서 국내 자영업자들의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무급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이 증가하여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에 놓여 있는 것이다.

2.2.3 외식 산업의 이해와 경영 환경

2.2.3.1 외식 산업의 정의와 이해

외식이란 가정에서 취사를 통하여 음식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음식점 등에서 음식을 사서 이루어지는 식사형태를 말하며, 외식 산업은 외식 상품의 기획·생산·유통·소비·수출·수입·가맹사업 및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식품 접객업은 6가지 분류로 표시되며, 한식은 일반 음식점 영업 분류에 속한다(이양우, 2019).

[표 2-14] 식품 접객업의 종류

영업의 종류	범위
휴게 음식점 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 행위 금지 (패스트푸드점, 커피숍, 찻집 등)
일반 음식점 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 허용(한식, 일식, 중식, 레스토랑 등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 부르는 행위 허용(유흥접객 행위 금지)
유흥 주점 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 및 유흥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 허용 (룸살롱, 카바레, 디스코 클럽 등)
위탁 급식 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제과점 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자료 :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 2018)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외식업의 분류는 일반음식점,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음식점업, 출장음식서비스업, 주점업, 비알콜음료점업으로 구분된다.

2.2.3.2 국내 외식 산업의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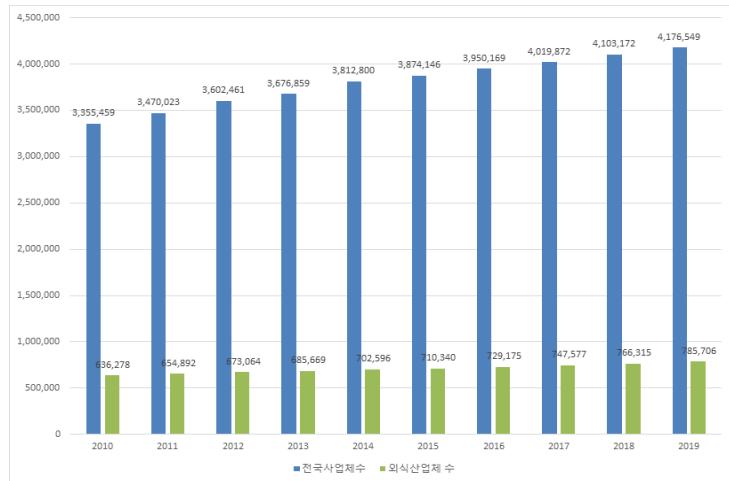
외식 산업은 경제 성장과 맞별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산업의 특징상 대부분의 사업체가 5인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체의 운영으로 이루어지며, 국내 음식 서비스 산업의 규모는 2019년 기준으로 사업체 수 약 79만 개, 종사자 수 약 222만 명, 매출액 약 136조 원임(통계청 2018, 전국사업체 조사) 전체 GDP의 평균 약 5~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양우, 2019).

[표 2-15] 전국 산업 사업체 수 및 외식업 산업체 수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사업체수	3,470	3,602	3,677	3,813	3,874	3,950	4,020	4,103	4,176
외식 사업체수	655	673	686	703	710	729	748	766	786

자료 : (통계청-시도·산업·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2021) 연구자 재편집 (단위 : 천개, 천명)

[그림 2-9]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수 및 외식업 산업체 수



자료 : (통계청-시도·산업·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2021) 연구자 재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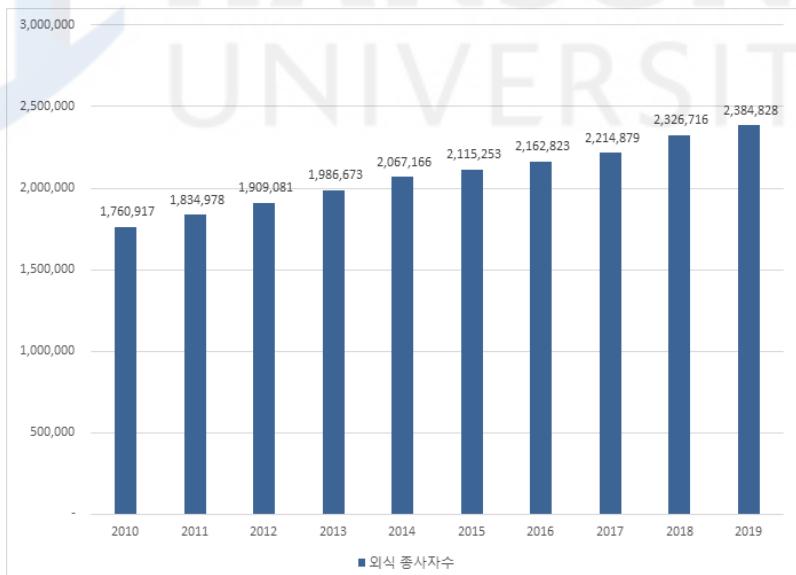
[표 2-16] 전국 총 사업체 종사자 수 및 외식 산업체 종사자 수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종사자수	18,093	18,569	19,173	19,899	20,889	21,259	21,626	22,234	22,723
외식 종사자수	1,834	1,909	1,986	2,067	2,115	2,162	2,214	2,326	2,384

자료 : (통계청-시도·산업·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2021) 연구자 재편집 (단위 : 천개, 천명)

업종별 종사자 현황을 보면, 음식점업 중 한식 음식점 종사자 수가 2019년 기준 약 97만명으로 전체 음식점업에서 57.9%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났다. 한식 음식점 내 업종별 비율을 보면 한식 일반음식점이 59.4%로 절반 이상의 비율을 보이며, 한식 육류요리전문점 24.7%,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9.6%, 한식 면요리 전문점 6.3% 순의 비율을 형성되어 있다.

[그림 2-10] 외식 산업 종사자 수 추이



자료 : (통계청-시도·산업·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2021) 연구자 재편집

[그림 2-11] 총 종사자 수와 외식업 종사자 수



자료 : (통계청-시도·산업·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2021) 연구자 재편집

2.2.3.3 음식 서비스업 종사자 고용 보험 가입 현황

음식 서비스업 종사자의 고용 보험 가입률은 24.4%로 전산업 59.9%보다 절반에 못 미치는 수치이며, 업종별로는 주점(11.9%), 분식 및 김밥전문점(21.1%), 치킨전문점(21.1%)이 음식서비스업 평균 가입률보다 낮은 수준이다.

음식 서비스업 종사자의 연령별 고용 보험 가입분포는 15~29세가 27.1%, 50~59세가 26.4%의 비율을 보이며,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의 경우 15~29세가 6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다. 외식업의 4대 보험 가입에 대하여 자영업자와 가족은 고용보험지원센터에서는 사업주로 간주하고 고용 보험 가입을 기피하며, 임시 및 일용 근로자는 수입 감소를 이유로 고용 보험 가입을 피하고 있으며, 외식 사업주가 부담하지 않는 한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비정규직의 고용 보험 가입률은 23.2%이며, 4대 보험 근로자분까지 부담률이 26%로 볼 때, 외식업종의 4대 보험 가입자는 평균(가입대상 27.5%+23.2%+25%)은 25.3%이므로 외식 기업에 직원 1명이 4대 보험을 가입하면 실질 근무 직원은 미가입자 포함하여 최소 3명 정도는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이양우, 2019).

음식 서비스업 종사자의 연령별 고용 보험 가입 분포는 15~29세가 27.1%,

50~59세가 26.4%의 비율을 보이며,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의 경우 15~29세가 6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종사자의 질적인 고용에서는 2018년 음식점 및 주점업 월평균 근로 일수는 19.9일로 전년 대비 0.2일(1.0%) 감소하였으며, 근로 시간의 경우는 15.7시간(7.2%) 감소하였다. 월평균 임금의 경우 약 176만원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한 수준이다.

[표 2-17] 음식점 및 주점업 전 규모 근로 부문 현황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근로일수	전체근로일수	21.1	21.0	20.7	20.1	19.9
	상용근로일수	23.2	23.5	23.4	23.1	23.1
	임시일용근로일수	16.7	15.7	15.1	13.7	13.8
근로시간	전체근로시간	175.4	175.6	172.1	171.2	159.7
	상용총근로시간	203.2	205.5	203.1	204.7	195.8
	상용소정실근로시간	196.5	200.1	197.2	194.2	188.9
	상용초과근로시간	6.7	5.4	5.9	10.5	6.8
	임시일용근로시간	115.3	112.3	108.5	100.0	90.0
임 금	전체임금총액	1,682,280	1,709,790	1,758,764	1,857,345	1,757,468
	상용임금총액	2,082,629	2,137,051	2,219,323	2,364,873	2,246,911
	상용정액급여	1,940,714	2,014,833	2,083,677	2,136,739	2,060,243
	상용초과급여	78,444	72,445	80,536	137,623	100,165
	상용특별급여	63,471	49,772	55,110	90,511	86,503
	임시일용임금총액	815,745	805,940	815,128	779,928	812,730

자료 : (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 2019)

2.2.3.4 각 산업별 인력 수급 전망

1) 전체 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15세 이상의 취업자 수는 향후 10년간 약 130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증가 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는 사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나 사업체당 종업원 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950년 대 세대의 퇴직 등은 노동시장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고용률 상승이 둔화되며, 2020년대 후반에 하락세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2-18] 취업자 및 고용률 전망

구분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취업자	고용률
2017	43,930	27,748	63.2	26,725	60.8
2027	45,633	28,960	63.5	28,072	61.5
증감	1,703	1,213	0.3	1,347	0.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17-2027, 2020)

(단위: 천 명, %)

전망 기간인 2017~2027년 산업별 고용 구조의 변화는 농업 및 제조업의 고용 축소와 서비스업의 고용 확대로 전망되고 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고용 비중은 2017년 8.6%에서 2027년 8.7%로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조업의 고용 비중은 같은 기간 17.1%에서 16.8%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외식 산업의 인력 수요 전망

외식서비스 산업 전체 취업자 수는 2017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0.6%씩 증가하여 2,430천 명으로 전망된다. 2013년 1,984천 명이었던 취업자 수는 2017년에 2,288천 명으로 4년 동안 304천 명이 증가하였으며, 향후 전망

치에 따르면 2017년 2,400천 명에서 2027년 2,430천 명으로 증가하여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0.6%씩 증가하여 30천명의 추가적인 인력 수요가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9] 음식 서비스 분야 취업자 수 전망

구 분	기준 연도	취업자 수	증감	연평균 증감율
숙박 및 음식점업	2013	1984		3.6
	2017	2288	303	1
	2022	2400	112	0.2
	2027	2430	30	0.6
숙 박 업	2013~2017	122		2.4
	2017~2022	134	12	1.7
	2022~2027	146	12	0.2
	2017~2027	147	2	1.0
음식점 및 주점업	2013~2017	1863		3.7
	2017~2022	2154	291	0.9
	2022~2027	2255	101	0.2
	2017~2027	2283	28	0.6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 2017-2027, 2021) (단위: 천 명, %)

- 중분류별 취업자 비중 = (중분류별 취업자 수/대분류별 취업자 수)X100,

[그림 2-12] 2017~2027 기간 증감 규모 기준 상위 10개 직종



자료 : (통계청, 2020)

2.2.3.5 외식 산업의 창·폐업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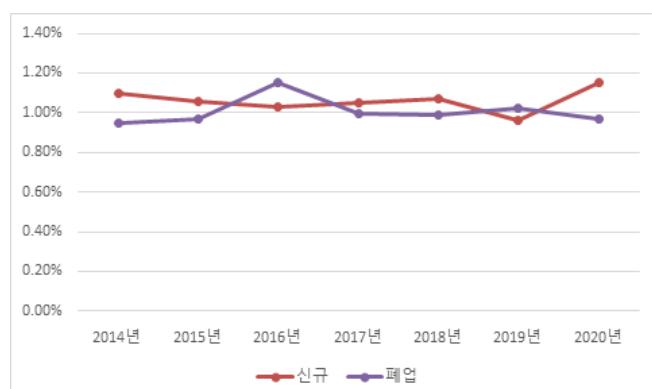
외식 산업의 창업과 폐업 현황을 살펴보면 생계형 업종을 중심으로 창업과 폐업이 빈번히 발생하고, 창업기업의 생존율도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소상공인 창업은 연평균 75만개, 폐업은 67만개로 이중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이 전체 신생 기업의 48%와 소멸 기업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13] 음식업 종사업자 및 개/폐업 현황



자료 : (국세청-신규 사업자 및 폐업자 현황, 2021) 연구자 재편집

[그림 2-14] 음식업 사업자의 개/폐업률 추이



자료 : (국세청-신규 사업자 및 폐업자 현황, 2021) 연구자 재편집

2.3 최저임금에 대한 선행 연구 및 조사 방법

최저임금 제도가 고용 및 고용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최저임금 연구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의 상관 관계 분석에 대한 연구는 전체 산업 형태별, 또는 성별, 특정 임금 수준 계층, 고용 특성, 고용 구조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특히 국내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이 높아지고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업종 및 대상 근로자가 확대되었던 2000년대 중반부터 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국내 외 다양한 최저임금에 대한 연구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또는 영향력이 미비하다는 연구 결과까지 다양하게 논의 되었다. 선행 연구에서 다루어진 대상은 주로 고용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이었다. 물론 각 산업별로 최저임금에 대한 연구 발표를 통해 각 분야의 이해 요소를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기본 목적인 근로자의 최저 생계보장 및 근로 조건에 대한 최적화 연구는 많이 연구 되었지만 사업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좀 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거 같다. 외국의 경우 1980년도 초부터 최저임금에 대한 연구는 시작되었고 Heekman&Sedlacek (1981)는 최저임금 20% 상승 가정 후 인종별로 최고 34%까지 고용이 감소 된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Neumark&Wascher(2000)는 Card&Krueger(1994)의 설문 방식에 대한 보완하여 전화 설문이 아닌 행정 data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 최저임금이 10% 인상 시 고용이 2.1% 감소한다고 결과를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국내 연구로는 최저임금과 고용 효과에서 2008년~2010년 까지의 data를 활용하여 연구하였다(김대일 2012). 연구결과로 최저임금의 임금 하위 15% 이하 저임금 집단의 신규 채용이 억제된다고 제시하였다(김민성 외, 2014). ‘지역별 물가를 반영한 최저임금의 변화에 따른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서 2000~2008년 한국노동패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지 물가를 반영한 실질 최저임금의 변화에 따라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지역 학력별, 연령대별, 규모별로 분석하였고 24세 고졸의 경우 최저임금이 10% 상승할 때 고용률은 약 3.7% 감소한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2018년 상반기 자료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고 최저

임금에 대한 정부 정책을 검토해 보았다(정임묵, 2019). 1인 이상 또는 10인 이하로 운영되는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아주 높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기대한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기업생존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경영 악화가 온다고 하였다. 국가 발전의 측면에서 볼 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비중으로 그 경제 활동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관한 정책의 시행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측면에서 볼 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기존 연구로 볼 때 최저임금은 긍정적인 효과보다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각도에서 볼 때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시행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관한 실증 분석은 거의 없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에 주는 영향을 더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 이에 관한 실증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 측정해 보고 위의 기존 연구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준 영향을 시계열로 검토하며 분석하여 보면 특히 외식업 분야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비교·검토하였다. 최저임금에 대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표 2-20] 최저임금 선행 연구 비교표

연구자	연구 관점	결과
Heekman & Sedlacek (1981)	최저임금과 고용효과	최저임금 20% 상승 가정 후 백인 남성 19%, 백인 여성 34%, 흑인 남성 31%의 고용 감소
Card and Krueger (1994)	최저임금과 고용효과	자연실험방법 적용/ 동일 거시경제와 노동시장이 유사한 환경에 오직 최저임금만을 차별화하여 진행 (전화 설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임금 인상 지역 : 고용 감소 없음 - 최저임금 고장 지역 : 고용 증대 효과

Neumark and Wascher(2000)	최저임금과 고용효과	Card & Krueger(1994)의 설문 방식에 대한 보완 전화 설문이 아닌 행정 data 활용분석 - 최저 임금이 10% 인상 : 고용이 2.1% 감소
Kawaguchi & Yamada (2007)	최저임금과 고용효과	최저임금 10% 인상된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 - 높은 임금을 받는 여성들보다 오히려 30% 정도 고용이 유의하게 감소
김대일(2012)	최저임금과 고용효과	2008년 ~2010년 data 활용 - 최저임금의 임금 하위 15% 이하 저임금 집단의 신규 채용이 억제
김민성 외 (2014)	지역별 물가를 반영한 최저임금의 변화에 따른 고용에 미치는 효과	2000~2008년 한국노동패널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지 물가를 적용한 실질 최저임금의 수준에 따라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지역 규모별, 학력별, 연령대별로 분석 - 24세 고졸의 경우 최저임금이 10% 상승할 때 고용률은 약 3.7% 감소
강승복·박철성 (2015)	최저임금과 고용효과	2001~2013년 경제활동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연도별 자료를 구축하고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분석 - 최저임금이 10% 상승에 따라 고용률은 0.4 ~09% 감소
이정민&황승진 (2016년)	최저임금과 고용효과	최저임금이 1% 상승할 경우 고용률은 0.14% 감소
고용노동부 & 노용진 (2019년)	최저임금 영향분석 토론회	고용노동부 주관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은 고용감축과 근로시간 단축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라고 공식 연구 결과 발표
황희영(2019)	최저임금제도가 내수경제가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제도는 소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외환위기 이후 소비에 대한 최저임금제도의 정(+)의 영향은 이전 시기에 비해 더욱 증

		대된 것으로 나타남. 투자에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정임묵(2019)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인 이상 또는 10인 이하로 운영되는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아주 높은 영향을 받는 것

자료 :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논자 정리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을 참조하고 통계청, 국세청, 한국은행데이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한국외식산업연구등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시계열 분석을 통해 각종 data에 의한 분석으로 최저임금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최저임금의 정책 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2-21] 선행 연구와 본 연구 비교표

구 분	선 행 연 구	본 연 구
사 전 성 과	연구 범위	전체적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규모별 구분을 통한 자영업 소상공인을 중점으로 연구하며 그중 외식업 중심으로 연구
	변수의 구성	연구 결과가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에 대하여 결론을 맺음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따른 소상공인 중 영세기업이 많은 외식업에 미친 결과에 대한 변화를 연구하고자 함
	각 현황 별 Data 분석으로 연구	각 현황 별 Data를 교차 분석하여 상호 인과관계에 의한 상호 작용에 대해 분석하고자 함

자료 :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논자 정리

III. 연구 결과

3.1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

3.1.1 최저임금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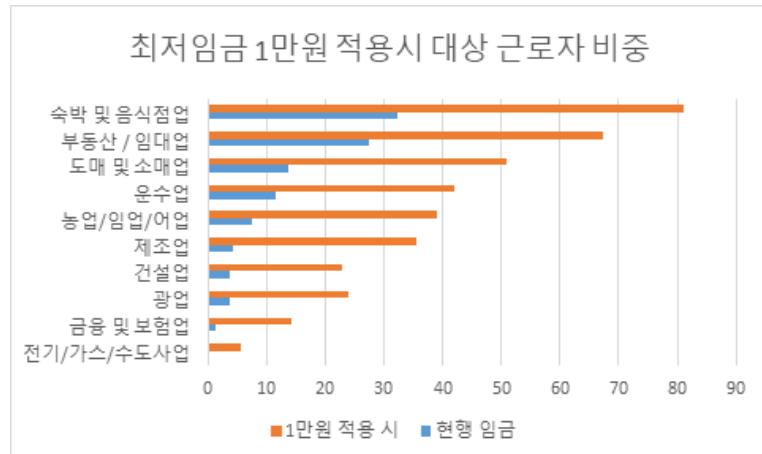
2017년 5월 출범한 현 정부가 내세운 대선 주요 공약 중 하나는 당시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을 부임 다음 해인 2018년부터 3개년에 걸쳐 1만원 수준까지 상향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공약은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Income-led growth)이 자리하고 있었고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임금을 인상하여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면 이에 비례하여 소비도 늘어나는 만큼 내수 진작을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 19의 경제 난국으로 2020년 이후 인상률은 저조해졌으며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으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공약 수준인 1만원으로 결정할 때 적용되는 근로자의 비중은 다음 [표 3-1]와 같다.

[표 3-1] 최저임금 1만원 적용 시 대상 근로자 비중

업종	현행 임금	1만원 적용 시
전기/가스/수도사업	0.2	5.7
금융 및 보험업	1.4	14.3
광업	3.7	24
건설업	3.8	23
제조업	4.3	35.5
농업/임업/어업	7.6	39
운수업	11.6	41.9
도매 및 소매업	13.7	51
부동산 / 임대업	27.4	67.4
숙박 및 음식점업	32.2	81

자료 : (통계청, 2020)

[그림 3-1] 최저임금 1만원 적용 시 대상 근로자 비중



자료 : (통계청, 2020)

표와 같이 최저임금이 1만원이 달성되면 가장 많이 적용되는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32.2%→81%)이며, 전기/가스/수도사업 업종(0.2%→5.7%)은 가장 적게 적용되는 업종이다. 따라서 숙박 및 음식점업은 상대적으로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형성돼 있으며 전기/가스/수도사업 노동자의 임금은 고임금 근로자로 형성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3.1.2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기능적 효과

3.1.2.1 긍정적인 순기능 – 긍정적 영향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 감소를 만든다는 연구결과는 실증적으로 불확실하며 오히려 증가한다는 결과도 나온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실태조사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시키고, 간접적으로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인하하여 상승폭을 늦추는 영향도 있다. 특히 사업체 내 최저임금 비중이 1% 증가할 때 사업체 내 임금의 표준 편차는 0.3-0.5%까지 감소하여 기업 내에 소득 불평등 해소도 이루어 진다(유영성, 2018).

1) 최저임금과 가구 중위 소득(명목 실질)의 비교

2018년 2,639만원, 전년 대비 65만원 증가한 중위 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정리했을 때, 명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 동향 조사를 기본으로 하여 전년도 중위 소득 현황에 과거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결정한다. 중위 소득은 2015년부터 기존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었던 최저 생계비 대신 정부의 복지 정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2020년 중위 소득은 월 환산으로 1인 가구 178만원, 2인 가구 298만원, 3인 가구 387만원, 4인 가구 475만원 등이다. 최저임금의 인상률과 함께 동반 상승하는 것으로 보여 주고 있다.

[표 3-2] 2020년 중위 소득 비교표

구분	2020년 중위 소득 (단위: 원)		
	70%	100%	150%
1인	1,230,036	1,757,195	2,635,791
2인	2,094,386	2,991,982	4,487,970
3인	2,709,404	3,870,578	5,805,866
4인	3,324,422	4,749,175	7,123,761
5인	3,939,440	5,627,773	8,441,657
6인	4,554,458	6,506,369	9,759,552
7인	5,172,801	7,389,714	11,084,5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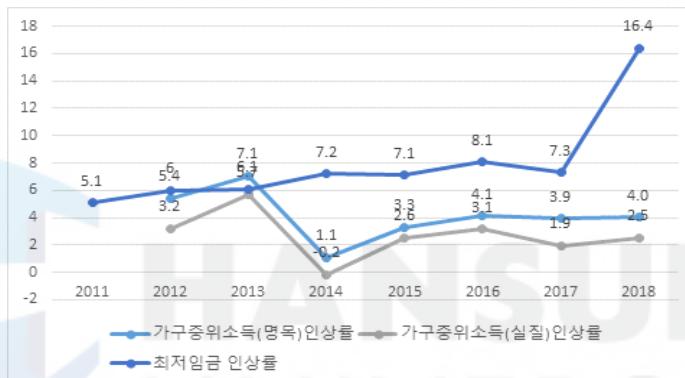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20)

[표 3-3] 연도별 중위 소득(명목, 실질)과 최저임금 비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가구중위소득(명목)인상률	5.4	7.1	1.1	3.3	4.1	3.9	4.0
가구중위소득(실질)인상률	3.2!	5.7	-0.2	2.6	3.1	1.9	2.5
최저임금 인상률	6	6.1	7.2	7.1	8.1	7.3	16.4

자료 : (통계청, 2020) 연구자 재편집

[그림 3-2] 연도별 중위 소득(명목, 실질)과 최저임금 비교



자료 : (통계청, 2020) 연구자 재편집

2) 최저임금과 월평균 급여 인상률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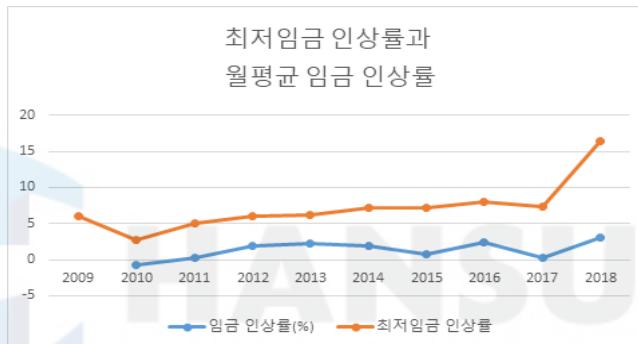
2018년 289만 9천원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급여액은 45.2%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일자리의 질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다(국민 삶의 질, 2019). 월평균 임금은 근로자가 매월 받는 급여의 총액으로 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월 월균 임금은 근로시간을 고려한 임금 수준의 정확한 비교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근로자의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판단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국민 삶의 질, 2019). 월평균 임금의 시계열 비교를 위해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실질 금액)는 2010~2018년 소비자 물가 지수를 적용하여 실질 금액으로 비교하였다. 가구 중위 소득은 2014년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늘어났다.

[표 3-4] 월 평균 임금 인상률과 최저임금 비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월평균 임금(실질)	2,555	2,563	2,611	2,669	2,719	2,740	2,806	2,814	2,899
임금인상률 (%)	-0.74	0.31	1.87	2.22	1.87	0.77	2.41	0.29	3.02
최저임금 인상률	2.8	5.1	6.0	6.1	7.2	7.1	8.1	7.3	16.4

자료 : (통계청, 2020) 연구자 재편집

[그림 3-3] 월 평균 임금 인상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비교



자료 : (통계청, 2020) 연구자 재편집

2018년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고려한 월 평균 임금은 289만 9천원(실질 금액)으로 2017년 281만4천원보다 8만5천원 증가하였다(국민 삶의 질, 2019). 정규직의 월평균 급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정규직의 월평균 급여 상승폭에 비해 비정규직의 월평균 급여 상승폭이 적고 때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의 차이가 오히려 일정 부분 커지는 것을 보여준다. 최저임금의 인상률과 함께 동반 상승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3) 상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 불평등 지표로 지니 계수 뿐만 아니라 소득 5분위 배율이나 상대적 빈곤율도 자주 사용된다(국민 삶의 질, 2019). 소득 불평등에 속한 지표들은 사회의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중요하다. 상대적 빈곤율

은 전체 사회에서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로 빈곤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민 삶의 질, 2019). 상대적 빈곤율은 빈곤 가구의 규모를 나타낸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상대적 빈곤율은 지난 2011년의 18.6%에서 2018년 16.8%로 크게 낮아지지 않았지만,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비교하면 고연령일 경우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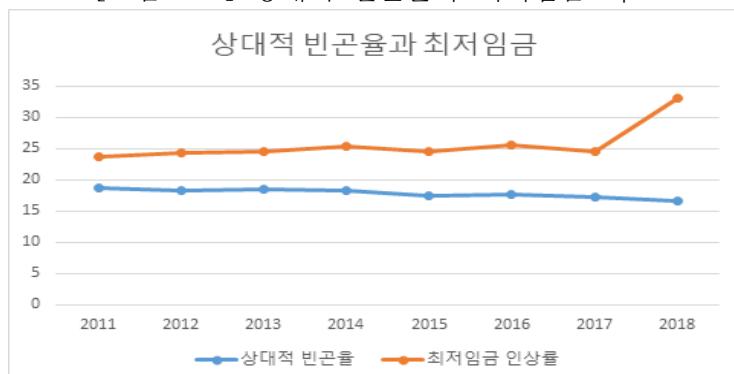
[표 3-5] 상대적 빈곤율과 최저임금 비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상대적 빈곤율	18.6	18.3	18.4	18.2	17.5	17.6	17.3	16.7
최저임금인상률	5.1	6.0	6.1	7.2	7.1	8.1	7.3	16.4

자료 :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2020)

OECD 연구에 의하면 2016년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17.6%)은 미국(17.8%)보다 낮지만 영국(11.2%), 독일(10.4%), 프랑스(8.4%) 등에 비해서는 높다. 전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지만 다른 나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에 비해 65세 이상 노년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5.1%로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나라인 미국(22.9%), 호주(23.2%) 보다도 월등히 높다(국민 삶의 질, 2019).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 빈곤율도 낮아짐을 나타내고 있다(국민 삶의 질, 2019).

[그림 3-4] 상대적 빈곤율과 최저임금 비교



자료 :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2020)

4) 소득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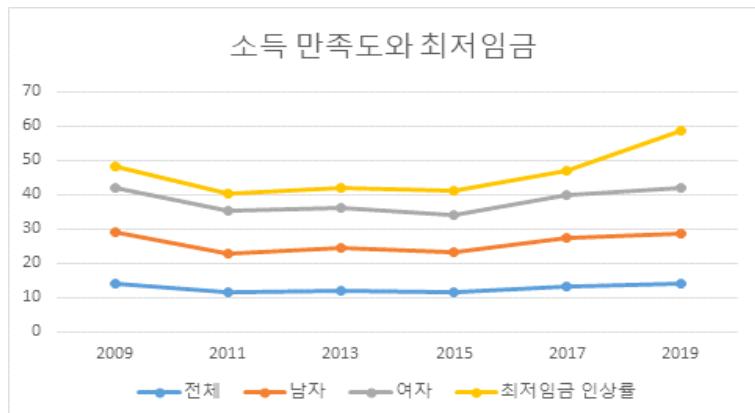
소득 만족도는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로 객관적인 소득 수준과 별도로 자신의 소득에 대한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개인들의 물질적 생활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다(국민 삶의 질, 2019). 소득이 있는 근로자(만 19세 이상) 중 실제 소득 부분에 대해 ‘매우 만족’ 이거나 ‘약간 만족’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합산한다. 소득 수준이 비슷하더라도 소득에 대한 개인 각각의 만족도가 다를 수 있으나 만족도가 소득 수준과는 다르게 인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은 클 수 있다. 소득이 증가하였어도 한국인의 소득 만족도는 높은 편이 아니다. 통계청 「사회조사」로 분석한 소득 만족도에서 소득에 대해 적정하다고 인정한 사람들의 비율은 2019년 기준 14.3%에 불과하다(국민 삶의 질, 2019). 국민 10% 정도가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여자보다 남자의 만족도가 약간 높다(국민 삶의 질, 2020). 연령별로는 30~40대의 소득 만족도가 높고, 높은 연령 일수록 낮아진다(국민 삶의 질, 2020). 40대의 만족도가 17.6%로 가장 높으며, 60세 이상에서 10.6%로 가장 낮다. 최저임금의 상승률과 함께 올라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3-6] 소득 만족도와 최저임금 비교

구 분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전 체	14.1	11.7	12.1	11.4	13.3	14.1
남 자	14.8	11.2	12.2	11.8	13.9	14.7
여 자	13.1	12.5	11.8	10.9	12.6	13.3
최저임금인상률	6.1	5.1	6.1	7.1	7.3	16.4

자료 : (국민 삶의 질, 2020) 연구자 재편집

[그림 3-5] 소득 만족도와 최저임금 비교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 2020) 연구자 재편집

5) 소비 생활 만족도

소비 생활 만족도는 자신의 소비 생활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로 소비지출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 태도를 보여준다. 객관적인 소비수준과는 다른 자신의 소비 생활에 대해 개인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관적 성향의 경제 생활 수준에 대한 평가 지표이다. 개개인의 소비 생활에 대해 ‘매우 만족’ 이거나 ‘약간 만족’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소비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2017년 15.4%에서 2019년 16.8%로 1.5%p 높아졌다. 소득 만족도와 비교하여 2.8% 정도 약간 높으나 소비 생활 만족도도 낮은 수준이다. 소득 만족도와 같이 소비 생활 만족도 또한 남자 17.2%로 여자(16.6%)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연령별로 보면 소비 생활 만족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져 소득 만족도와는 차이를 보인다(국민 삶의 질, 2019). 40대의 소비 생활 만족도는 거의 비슷하고 29세 이하의 만족도가 20.4%로 가장 높다. 반면 50대와 60대는 각각 15.5%, 11.7%로 좀 더 낮아진다. [그림 3-6]에서는 최저임금의 상승과 함께 소비 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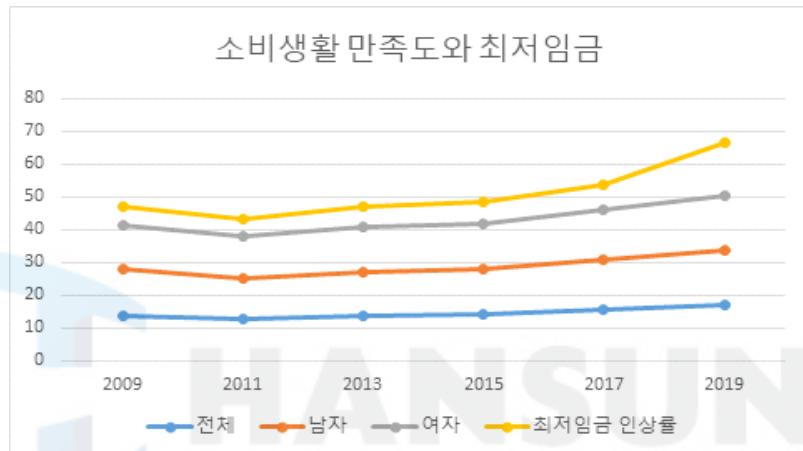
[표 3-7] 소비 생활 만족도와 최저임금 비교

구 분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	------	------	------	------	------	------

전체	13.7	12.7	13.6	13.9	15.4	16.8
남자	14.3	12.3	13.4	14.1	15.6	17
여자	13.1	13.1	13.9	13.6	15.2	16.6
최저임금인상률	6.1	5.1	6.1	7.1	7.3	16.4

자료 : (국민 삶의 질, 2019) 연구자 재편집

[그림 3-6] 소비 생활 만족도와 최저임금 비교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 2020) 연구자 재편집

6) 저임금 근로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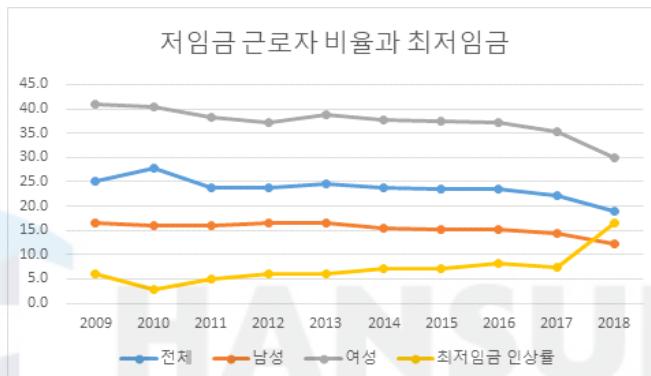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핵심 자료이다. 일반적으로 중위임금의 2/3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를 저임금으로 본다. 높은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은 노동시장의 불평등 및 높은 근로 빈곤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임금 근로자의 구성은 개인의 삶의 수준에 많은 영향을 주는 부분이며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은 2015년 23.6%로 지난 15년간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18년에는 19.1%로 전년 대비 3.3%가 감소하였다(국민 삶의 질, 2019). 이 비율은 2018년 남자 근로자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12.2%인데 여자 근로자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30.1%에 달한다(국민 삶의 질, 2019). 2017년도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22.3%)은 다른 비교 국가 중 미국(24.6%) 다음으로 높다.

[표 3-8] 저임금 근로자 비율과 최저임금 비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 체	25.0	27.7	23.8	23.9	24.7	23.6	23.5	23.5	22.3	19.0
남 성	16.5	16.1	16.0	16.5	16.6	15.3	15.2	15.3	14.3	12.1
여 성	41.0	40.4	38.2	37.3	38.9	37.9	37.6	37.2	35.3	30.0
최저임금 인상률	6.1	2.8	5.1	6.0	6.1	7.3	7.1	8.1	7.3	16.4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 2020) 연구자 재편집

[그림 3-7] 저임금 근로자 비율과 최저임금 비교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 2020) 연구자 재편집

덴마크나 핀란드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10% 미만으로 한국의 1/3 수준에 불과하다(국민 삶의 질, 2019).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줄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8] 세계주요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2017)



자료 출처 : (OECD-Earnings, 2020)

7) 성별 및 연령, 집단별 일자리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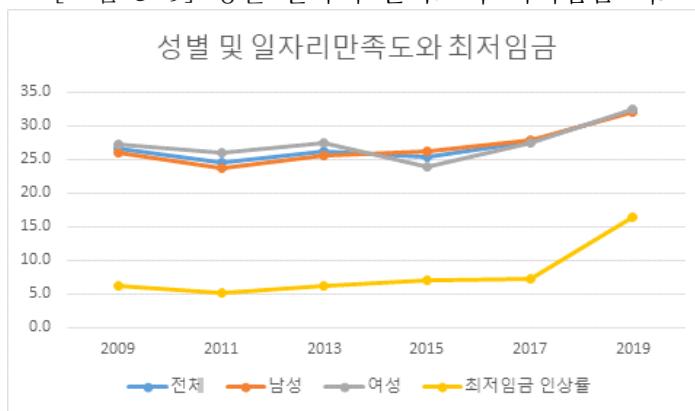
근로 시간 및 월 평균 급여 등이 근로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수준을 나타내 준다면, 일자리 만족도는 직업 환경에 대한 개인적 만족도를 평가하는 주관적 지표이다. 일자리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고용의 안정성, 임금 수준, 일의 내용 등에 대한 만족도를 별도로 연구하기도 하는데, 이 지표는 별도의 지표들을 산출하고 나서 전반적인 만족도를 다시 분석한 것으로 근로 활동 부분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제시하는 핵심 지표의 성별로는 남자 근로자와 여자 근로자의 일자리 만족이다. 통계청 「사회조사」로 조사한 일자리 만족도는 2017년 대비 2019년은 32.4%로 4.8%p 증가하였다. 2009년 26.7%에서 2017년 27.7%로 큰 차이 없으며 최근 만족도가 증가했다. 연도 별로는 차이가 적고, 연령대로는 50세 이상 장년층 근로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일자리 만족도는 직종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30대 근로자의 만족도는 큰 차이 없으며 연령별로는 50세 이상 장년층 근로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30대 근로자의 만족도가 2018년 34.4%로 다른 연령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다. 일자리 만족도는 직종별로 차이가 있어서 전문 관리직에서는 47.3%로 가장 높고, 사무직도 38.0%로 상대적으로 높다(국민 삶의 질, 2019). 반면, 서비스판매직과 기능노무직에서의 만족도는 각각 27.3%, 20.8%로 낮게 나타나 직종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국민 삶의 질, 2019). 최저임금의 상승과 함께 일자리 만족도 또한 같이 상승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표 3-9] 성별, 연령 집단별 일자리 만족도와 최저임금 비교

구 분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전체	26.6	24.6	26.3	25.3	27.7	32.3
남성	26.1	23.7	25.6	26.2	27.8	32.1
여성	27.3	26.0	27.4	24.0	27.5	32.5
최저임금인상률	6.1	5.1	6.1	7.1	7.3	16.4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 2020) 연구자 재편집

[그림 3-9] 성별 일자리 만족도와 최저임금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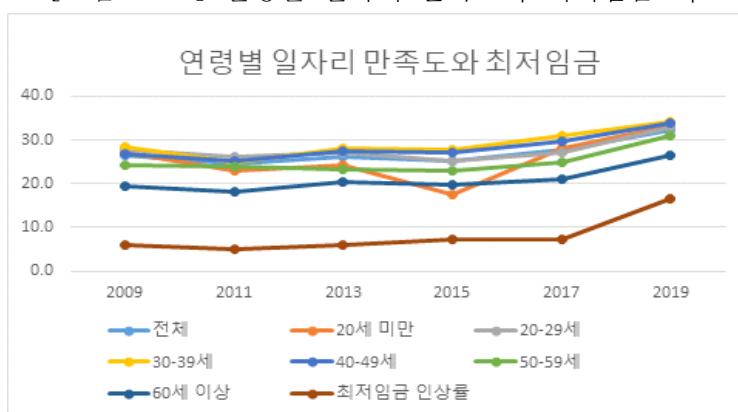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 2020) 연구자 재편집

[표 3-10] 연령별 일자리 만족도와 최저임금 비교

구 분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전체	26.6	24.6	26.3	25.3	27.7	32.3
20세 미만	27.3	23.1	24.2	17.4	28.2	33.3
20~29세	27.9	26.2	27.2	25.2	27.3	32.9
30~39세	28.4	24.8	28.3	27.7	31.1	34.3
40~49세	26.9	25.3	27.6	27.1	29.7	33.8
50~59세	24.1	23.9	23.5	23.1	24.8	31.1
60세 이상	19.6	18.0	20.7	19.7	20.9	26.5
최저임금인상률	6.1	5.1	6.3	7.1	7.3	16.4

자료 : (국민 삶의 질, 2019) 연구자 재편집

[그림 3-10] 연령별 일자리 만족도와 최저임금 비교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 2020) 연구자 재편집

8) 임금근로자의 성별 및 연령 집단별 월간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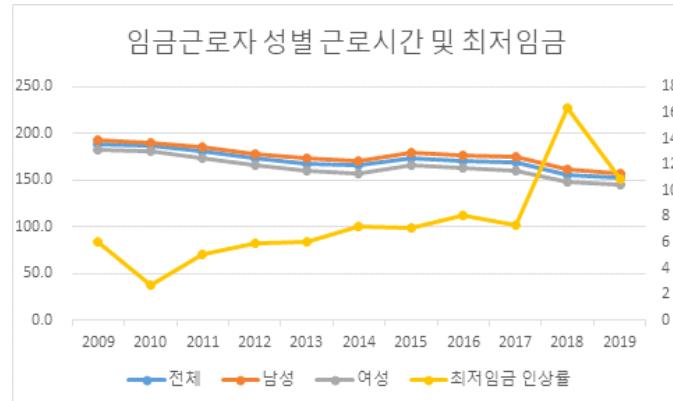
2018년 156.4시간, 전년 대비 12.1시간 줄어든 근무 시간은 근로자의 삶의 질과 노동 효율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이다. 효율성 높은 근로 시간을 통해 적정한 소득으로 여가 시간을 즐기는 것이 높은 삶의 질을 영유하는 것으로, 근로 시간이 많은 근로자의 삶의 질이 낮을 경우 근무 시간을 줄여 규정된 월간 근무 시간을 평균적으로 근로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임금 근로자의 2018년 월간 총 근로 시간은 156.5시간으로 2017년 168.6시간에 비해 12.1시간 감소하였다. 2015년에 2014년보다 8시간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work life valance)의 강조와 함께 최근 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어 근로 시간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다(국민 삶의 질, 2019).

[표 3-11] 성별 월간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비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187.0	180.8	173.7	167.9	165.5	173.5	171.1	168.5	156.4	152.4
남성	190.6	185.0	178.3	173.0	171.0	179.5	176.5	174.4	161.8	157.9
여성	181.2	174.0	166.4	159.9	157.1	166.0	163.2	160.1	148.6	144.6
최저임금 인상률	2.75	5.1	6	6.1	7.2	7.1	8.1	7.3	16.4	10.9

자료 : (e-나라지표, 2021) 연구자 재편집

[그림 3-11] 성별 월간 근로 시간과 최저임금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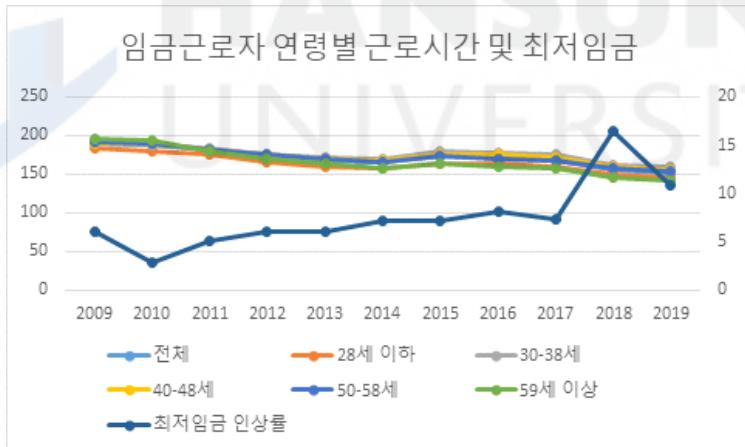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 2020) 연구자 재편집

[표 3-12] 연령별 월간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비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187	180.8	173.7	167.9	165.6	173.5	171.1	168.5	156.4	152.4
28세 이하	180.3	175.6	166.6	160.3	158.4	164.6	163.1	159.5	149.1	145.3
30~38세	187.6	183	176.5	170.9	171	180.1	177.8	175.8	162.5	158.9
40~48세	189.2	182.3	175.9	170.2	167.7	176.4	174.7	172.1	159.2	156.1
50~58세	190.5	181.5	175.4	169.7	164.8	173.2	170.4	168.2	157.1	152.8
59세 이상	192.8	180.6	169.8	163.1	158.6	163.8	159.6	157.7	146.1	140.9
최저임금 인상률	2.75	5.1	6	6.1	7.2	7.2	8.1	7.3	16.4	10.9

자료 : (고용노동부-고용노동통계, 2020)

[그림 3-12] 연령별 월간 근로 시간과 최저임금 비교



자료 : (고용노동부-고용노동통계, 2020)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근로 시간은 다소 장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성별로는 남자는 161.7시간, 여자는 148.2시간으로 남자의 근로 시간이 13.5시간 길다. 연령대로는 30~40대의 근로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2018년 30대 근로자의 근로 시간은 162.7시간, 40대는 159.4시간으로 29세 이하(149.3시간)와 60세 이상(146.3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고용 형태별로는 정

규직 근로자의 근로 시간이 2018년 169.5시간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시간 116.2시간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근무 시간이 점차 줄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3.1.2.2 부정적인 역기능 – 부정적 영향

1) 실업률과 최저임금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실업자 수가 2015년까지 판매종사원, 기능원 그리고 관련 기능 종사자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1만명 정도 감소하였으나 최저임금 인상 폭이 확정된 이후 7월에는 6.3만 명, 12월에는 15.8만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또한 전년 대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2018년 실업자 수가 8만명 정도가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실업자가 10만명 정도가 감소하였다. 최저 임금의 증가에 따라 실업자 증가도 일정 비율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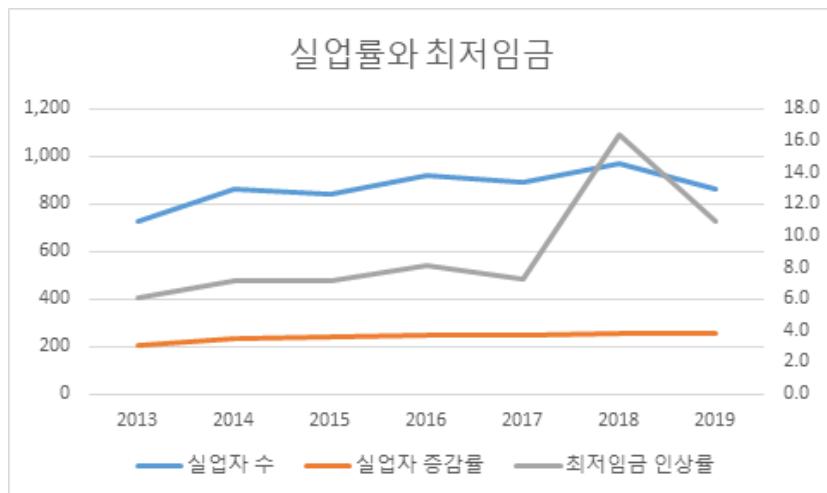
[표 3-13] 실업률과 최저임금 비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실업자 수(천명)	724	861	840	920	894	973	864
실업자 증감률	3.1	3.5	3.6	3.7	3.7	3.8	3.8
최저임금 인상률	6.1	7.2	7.1	8.1	7.3	16.4	10.9

자료 : (통계청-지역별고용조사, 2020) 연구자 재편집

기획재정부의 실사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정부 지원 일자리 안정 자금을 받아 고용을 이어나가지 않고 인원 감축으로 택한 실제 사례가 확인되었다. 또한 최저임금 10%가 오를 때, 임금은 약 1% 인상되며, 물가는 약 0.2%-0.35% 인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으며, 이는 2006-2011년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평균 3.5%임을 감안한다면 적지 않은 수치이다(유영성, 2018).

[그림 3-13] 실업률과 최저임금 비교



자료 : (통계청-지역별고용조사, 2020) 연구자 재편집

2) 고용률과 최저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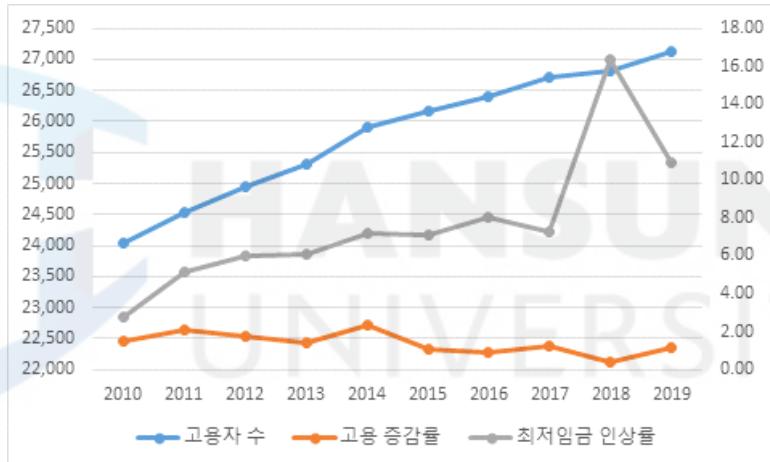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특정 시점에 취업해 있는 인구의 비율로 고용률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제로 취업하고 있는지를 가장 간단 명료하게 드러내는 지표로서 노동 시장의 현황을 핵심적으로 보여준다(국민 삶의 질, 2019). 실업률이 높아지고 실업자와 비경제 활동 인구의 경계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것에 대한 다른 견해가 있어 최근에는 고용률을 노동 시장의 현황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지표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국가 간 비교 지표로도 고용률이 주로 사용된다(국민 삶의 질, 2019). 2018년 고용률은 60.7%로 전년 대비 0.1%p 감소하였으며, 2014년 60.5%로 증가한 이후 비슷한 추세이다(국민 삶의 질, 2019). 남자는 여자보다 19.9%p 높으나, 여자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성별 차이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다. 연령별 고용률을 비교해보면 40대가 79.1%로 가장 높고, 30대와 50대가 75% 정도로 비슷하다.

[표 3-14] 고용률과 최저임금 비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고용자 수	24,527	24,955	25,299	25,897	26,178	26,409	26,725	26,822	27,123
고용 증감률	2.06	1.75	1.38	2.36	1.09	0.88	1.20	0.36	1.12
최저임금 인상률	5.1	6.0	6.1	7.2	7.1	8.1	7.3	16.4	10.9

자료 : (통계청-지역별고용조사, 2020) 연구자 재편집

[그림 3-14] 고용률과 최저임금 비교



자료 : (통계청-지역별고용조사, 2020) 연구자 재편집

그 다음으로 20대가 57.8%, 60세 이상이 40.2%로 나타난다. 2018년에는 2017년 대비하여 40대와 50대의 고용률이 감소했다. 2000년과 비교해보면 10대의 고용률은 2000년 10.3%에서 2018년 7.2%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다(국민 삶의 질, 2019). 30대에서 고용률은 점차적으로 증가 현상을 보이는 데, 40대와 60대에서는 2.5%p가 증가하며, 50대의 고용률은 2018년 75.2%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 주고 있다. 50대의 증가 현상은 우리 사회의 퇴직 나이가 많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최저 임금의 상승과 함께 고용자 수는 증가하지만 고용률은 점차 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3)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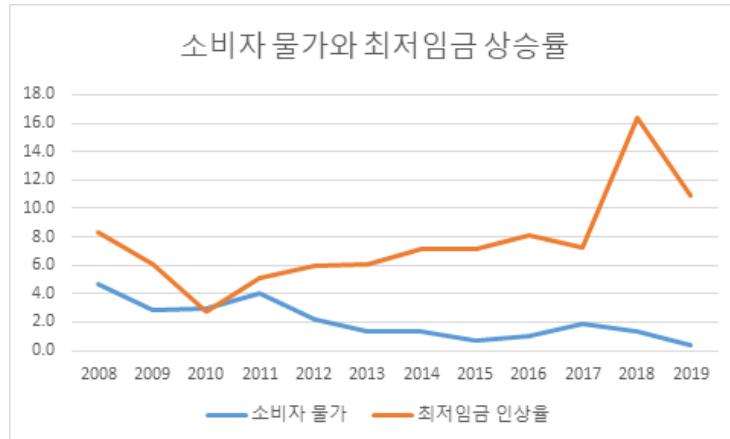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소비자 물가는 4% 이하로 형성되었다. 2011년에는 매달 4%가 넘는 높게 형성됐으며,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물가목표치 4.0%를 달성 못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했으며, 시간이 갈수록 물가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 안정 시책으로 인해 2% 이하의 물가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최저임금이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에 영향을 준다는 사항은 단기간 영향을 주지만 년 단위의 영향에는 크게 미치지 않는다는 통계 조사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상대 조건보다는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이 있다.

[표 3-15] 소비자 물가와 최저임금 비교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소비자 물가	3.0	4.0	2.2	1.3	1.3	0.7	1.0	1.9	1.4	0.4
최저임금 인상률	2.75	5.1	6	6.1	7.2	7.1	8.1	7.3	16.4	10.9

자료 : (통계청, 2020) 연구자 재편집

[그림 3-15] 소비자 물가와 최저임금 비교



자료 : (통계청, 2020) 연구자 재편집

3.1.2.3 시간 대비 형태 그래프(BOTG–Behavior Over Time Graph)에 의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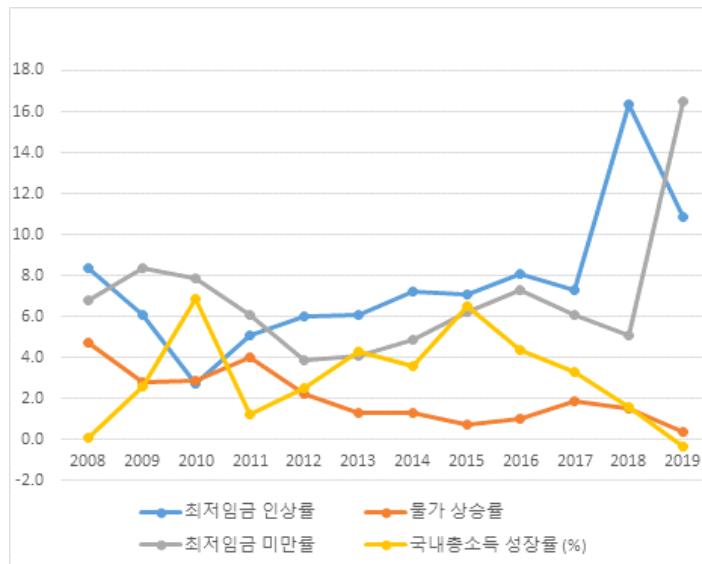
BOTG(Behavior Over Time Graph)는 ‘시간대비행태그래프’를 의미하며 {표 37}과 {그림 3-16}에서처럼 향후 일어날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시스템 사고의 도구 중 하나이다.

[표 3-16] BOTG를 활용한 최저임금 비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최저임금 인상률	6.1	2.8	5.1	6.0	6.1	7.2	7.1	8.1	7.3	16.4	10.9
물가 상승률	2.8	2.9	4.0	2.2	1.3	1.3	0.7	1.0	1.9	1.5	0.4
최저임금 미만률	8.4	7.9	6.1	3.9	4.1	4.9	6.2	7.3	6.1	5.1	16.5
국내 총소득 성장률 (%)	2.6	6.9	1.2	2.5	4.3	3.6	6.5	4.4	3.3	1.6	-0.3

자료 : (통계청-지역별고용조사, 2020) 연구자 재편집

[그림 3-16] BOTG를 활용한 최저임금 비교



자료 : (통계청-지역별고용조사, 2020) 연구자 재편집

위에서 제시한 그래프는 2008년부터 2019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되고 BOTG 기반의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연도별 최저임금 미만율,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 연도별 물가 상승률, 연도별 국내 총소득성장률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으로는

첫째, 최저임금 인상률이 기본적으로 전년도 물가 상승률에 근거하여 인상된다는 인식과는 달리 상기 그래프에 의하면 오히려 국내 총소득 성장률과 더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 총 소득이 오른다면 최저임금은 오히려 좀 더 높게 인상되는 예측이 가능하다.

둘째, 연도별 최저임금액이 2011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미만율과 교차되면서 상승 곡선이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는 곧 최저임금이 상승할 경우 최저임금 미만율도 함께 상승될거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표 3-17]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최저임금 상승률 비교

성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실업률	3.7	3.4	3.2	3.1	3.5	3.6	3.7	3.7	3.8	3.8
고용률	58.9	59.3	59.6	59.8	60.5	60.5	60.6	60.8	60.7	60.9
경제활동 참가율	61.1	61.3	61.6	61.7	62.7	62.8	62.9	63.2	63.1	63.3
최저임금 상승률	2.8	5.1	6.0	6.1	7.2	7.1	8.1	7.3	16.4	10.9

자료 : (통계청-지역별고용조사, 2020) 연구자 재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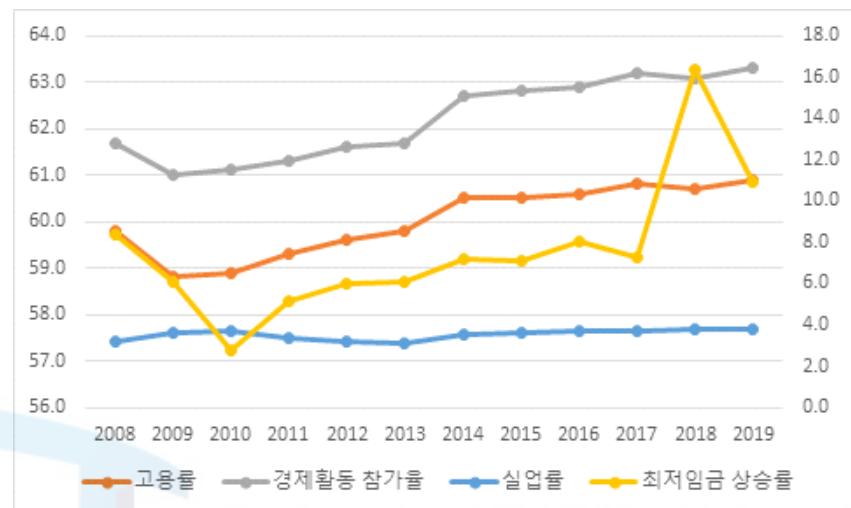
[표 3-17]과 [그림 3-17]에서는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최저임금 인상률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으로는

첫째, 최저임금의 인상률과 함께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이 모두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고용률과 경제활동증가율은 (+)의 방향으로 같은 비율로 움직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실업률은 소폭 증가하고 있다.

[그림 3-17]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최저임금 상승률 비교



자료 : (통계청-지역별고용조사, 2020) 연구자 재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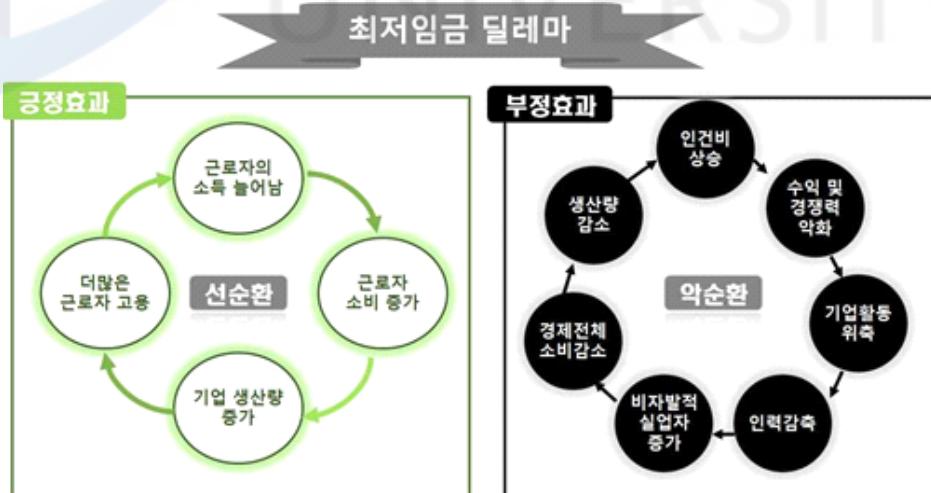
3.1.3 최저임금이 외식 산업에 미치는 영향

3.1.3.1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긍정적 효과

OECD 25개 회원국과 한국의 16개 시·도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비교한 결과, 최저임금이 전체 고용과 고령자, 청년, 여성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유영성, 2018).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를 축소시킨다고 연구한 많은 자료들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불명확한 부분도 많이 있으며, 오히려 반대로 증가한다는 결과도 존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08~2015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은 인상시키고,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은 인하시켜서 양극의 상승폭을 줄여 임금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또한 자체 내부에서도 최저임금이 1% 인상 될 경우 임금의 표준 편차는 0.3% ~ 0.5%까지 감소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8] 최저임금의 딜레마



3.1.3.2 최저임금 인상이 외식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업 실적 변화

외식 서비스 산업은 경제성장과 함께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산업의 특징상 대부분의 사업체가 5인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체에 집중되어 있으며, 국내 외식업 규모는 사업체 수 65만개, 종사자 수 189만명, 매출액 83.8조원이며 전체 GDP의 평균 약 5~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양우, 2019).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비중은 업종별로 상이한데 외식 산업의 특성상 타 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의하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업종별로는 '외식 산업' 근로자의 82%가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에 포함(2015년 기준)되며, '가스·전기·증기 및 수도 사업'의 경우 5.8%만이 포함 대상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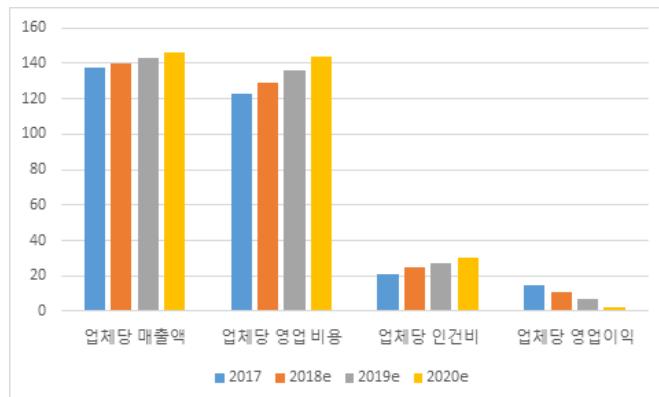
외식 서비스 산업의 전체 산업을 비교해볼 때 폐업률이 가장 높은 산업 분야이며, 신규 창업 진입 장벽이 낮아 시장으로의 유입이 크며, 동종 사업 내 경쟁률도 높아 폐업자 비율도 높은 산업 분야 중 하나이다. 음식업의 폐업률은 2015년 기준 22.3%로 가장 높으며, 이 수치는 전체 산업 폐업률 11.9%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은 비율로 나타나 있다

[표 3-18]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업실적 변화

구 분	2017	2018e	2019e	2020e
업체당 매출액	137.3	140.3	143.2	146.3
업체당 영업 비용	122.9	129.5	136.4	143.9
업체당 인건비	21.1	24.6	27.2	30.3
업체당 영업이익	14.4	10.9	6.8	2.4

자료 : (통계청, 2020) 연구자 재편집

[그림 3-19]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업실적 변화



자료 : (통계청-국세통계연보, 2020) 연구자 재편집

[표 3-19] 2010~2015 산업별 전체 폐업률(단위 : %)

업종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농·임·어업	8.5%	7.9%	7.7%	7.1%	6.5%	6.6%
광업	8.8%	8.4%	8.0%	8.3%	5.1%	5.6%
제조업	10.0%	10.0%	10.4%	10.0%	8.7%	8.1%
전기·가스·수도업	10.5%	10.8%	7.4%	6.6%	6.4%	9.0%
도매업	14.1%	13.9%	14.1%	13.8%	11.8%	10.4%
소매업	22.2%	23.0%	22.7%	21.5%	18.8%	17.2%
부동산매매업	17.3%	15.8%	16.1%	14.2%	11.4%	9.1%
건설업	12.9%	13.2%	13.4%	12.7%	10.8%	10.2%
음식업	28.8%	28.6%	26.5%	24.9%	23.4%	21.9%
숙박업	15.6%	16.0%	15.5%	15.4%	14.4%	14.9%
운수·창고·통신업	11.5%	11.4%	11.4%	10.7%	9.7%	8.6%
부동산임대업	6.3%	6.6%	5.9%	6.1%	6.5%	6.4%
대리·중개·도급업	24.8%	24.6%	25.4%	27.3%	21.7%	19.5%
서비스업	18.0%	18.4%	17.8%	16.5%	14.3%	12.8%
전체	15.4%	15.5%	15.0%	14.2%	12.8%	11.8%

자료 : (통계청, 2020 / 이양우,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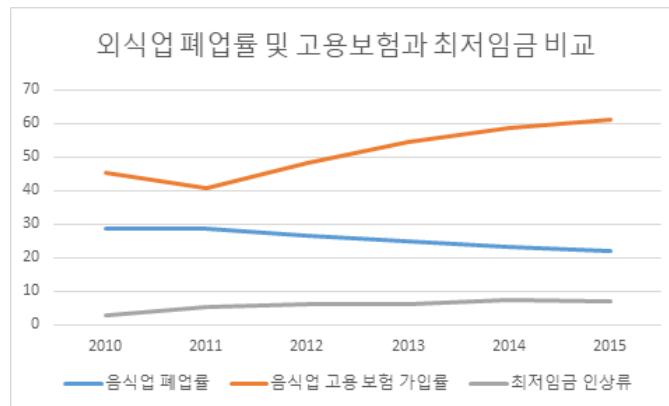
일반 음식점 종사상 지위별 종사자 수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일반 음식점 기준으로 볼 때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사업주와 무급가족(46.7%), 임시 및 일용근로자 (24.4%)의 비율을 합하면 71.1%이다. 외식업체의 경우 4대 사회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주요 원인은 소득 금액의 하락이 59.8%로 가장 높으며 최저 생계 수급자 신청 시 노령 연금 등에 의해 20.5%로 자격 정지, 12.6%는 신용 불량으로 인한 소득 누락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경영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료 분담 비중이 25.0%로 실 지급액의 감소 때문에 근로자가 4대 사회 보험 가입을 거부하여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 3-20] 외식업 폐업률 및 고용 보험과 최저임금 비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음식업 폐업률	28.8	28.6	26.5	24.9	23.4	21.9
음식업 고용 보험 가입률	45.4	40.7	48.3	54.6	58.7	61.0
최저임금 인상률	2.8	5.1	6	6.1	7.2	7.1

자료 : (통계청, 2020 / 한국외식연합, 2019) 연구자 재편집

[그림 3-20] 외식업 폐업률 및 고용 보험과 최저임금 비교



자료 : (통계청, 2020 / 한국외식연합, 2019) 연구자 재편집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고용 보험률은 높아지나 과도한 인건비 지출로 인

한 경영 악화로 폐업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외식 업계가 맞이할 충격은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서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6개월을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외식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추정한 바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임금 인상 후 변화는 크게 ‘영업실적’과 ‘고용’ 두 측면으로 보고자 하였으며, 두 자료를 연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에 대한 인건비의 탄력성은 약 0.58로 나타났으며, 최저임금이 1% 인상될 경우 근로 비용이 약 0.58%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 값을 정부가 제시했던 15.72%에 대입할 경우, 2018년부터 3년간 매해 인건비가 9.25%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 된다.

둘째, 이들 값을 토대로 2018~2020년의 외식업계 영업 실적을 추산 해본 결과, 첫해인 2018년에는 근로 비용이 전년 대비 약 2조 1천억 원이 증가하고 이후 2년간 매해 2조4천억 원, 2조 7천억 원이 추가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2017년보다 7조 1천억원이 증가한 22조 5천억원에 이르게 된다.

셋째, 인건비의 절대적 증가가 아닌 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영업 비용의 증가와 그만큼의 영업 이익의 감소로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상품 객단가의 증액 비율보다 영업 비용의 증대가 높아 2017년 기준 약 16.1%였던 인건비 비중이 2020년에는 20.7%까지 치솟아 같은 기간 영업 이익은 10.5%에서 1.7% 수준으로 격감된다는 점에 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영세한 외식업체 사업주들의 대응책은 그리 많지 않으며 대략 3가지 대응 방안이 예측된다.

첫째, 인건비 부담 가중에 따른 지출 증가와 그에 따른 영업 이익 감소로 폐업을 선택한다.

둘째, 영업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영업 이익 감소를 상쇄하기 위한 대안으로 종업원 수 혹은 종업원의 근무 시간을 감원 또는 단축한다.

셋째, 경영 개선 및 메뉴 가격을 인상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 경우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컨설팅 지원을 통한 경영전략 활성화가 필요하다.

3.1.4.2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외식 경영 시스템의 변화

TBSS(기술기반서비스)의 시스템 활용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 경영이 확대되고 있다. TBSS 서비스는 외식 산업과 관련된 가치사슬(Value Chain)의 변화를 주도하는 외식 트랜드로 현재 진행형이다. 외식 산업의 비대면 서비스 기술을 응용한 형태를 음식서비스 인적자원 개발위원회 연구보고서를 참조해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 외식 업체(303개 사업체)의 86.2%가 비대면 서비스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 중 44.6%(135개 사업체)에 해당하는 외식 업체는 TBSS 서비스를 도입했고 나머지 (168개 사업체)는 TBSS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목적으로는 매출 증대(58.5%), 인건비등 비용 절감(29.6%)이었는데 실제로 성과도에서도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한국외식업중앙회 2021).

[표 3-21] 비대면 서비스 도입 후 고용 변화

구 분		빈도 (개)	비 율 (%)
고용현황 (n=135)	고용 증가	5	3.3
	고용 감소	25	18.5
	고용 유지	94	69.6
	기타	11	8.6
고용 증가 이유 (n=5)	매출 상승 및 사업확장으로 인한 고용 확대	1	20.0
	서비스 인력 고용 확대	4	80.0
고용 감소 이유 (n=25)	매출 하락으로 인한 사업축소에 따른 고용 감소	5	20.0
	비대면 서비스 도입에 따른 필요 인력의 기계 대체	17	68.0
	비대면 서비스 도입에 따른 파트타임 인력 확대	3	12.0

자료 : (한국외식산업연구원, 2021)

1)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사용 사업체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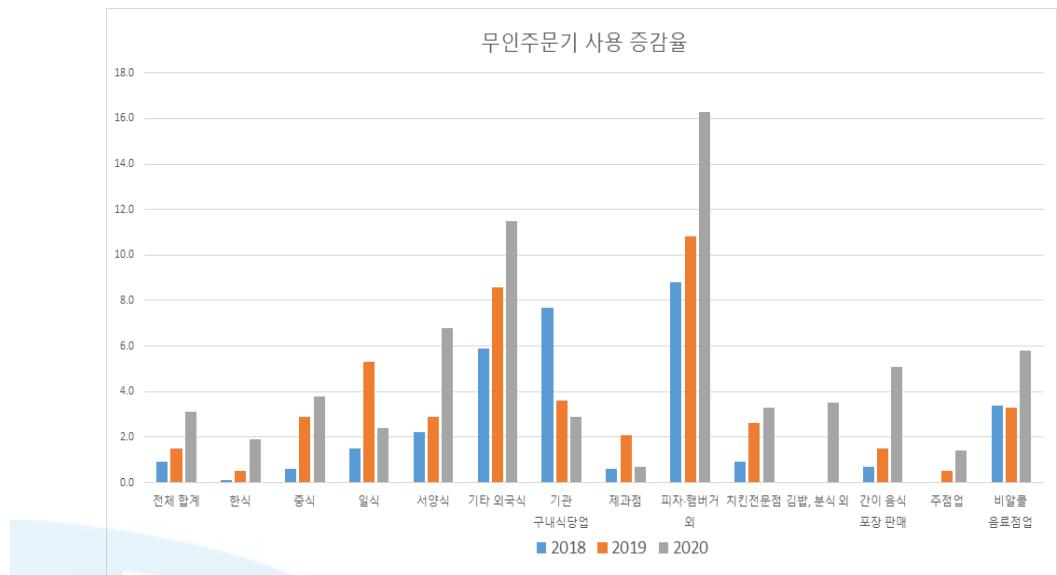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과 구인란에 대한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TBSS(기술 기반서비스)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대표적인 서비스는 무인 주문기(키오스크)로 꾸준히 사용 업체가 늘어가는 추세이다.

[표 3-22] 음식점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사용 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전체 합계	0.9	1.5	3.1
한식	0.1	0.5	1.9
중식	0.6	2.9	3.8
일식	1.5	5.3	2.4
서양식	2.2	2.9	6.8
기타 외국식	5.9	8.6	11.5
기관 구내식당업	7.7	3.6	2.9
제과점	0.6	2.1	0.7
피자·햄버거 외	8.8	10.8	16.3
치킨전문점	0.9	2.6	3.3
김밥, 분식 외	0.0	0.0	3.5
간이 음식 포장 판매	0.7	1.5	5.1
주점업	0.0	0.5	1.4
비알콜 음료점업	3.4	3.3	5.8

자료 : (통계청, 2021) 연구자 재편집

[그림 3-21] 음식점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사용 증감율



자료 : (통계청, 2021) 연구자 재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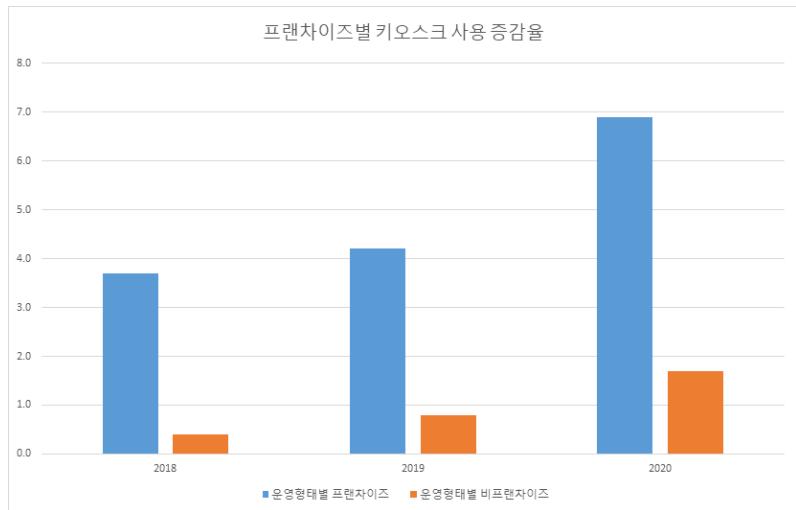
직원이 필요하지 않은 무인 주문기(키오스크)를 초기 창업 시 운영 방식을 택하는 점포가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이다. 특히 온라인 기술에 익숙한 20~30대가 주 고객인 아이템에서는 거의 모든 점포에 설치되고 있다. 외식 산업 전체적으로 볼 때 2018년 0.9%였으나 2020년 3.1%로 3배 이상 무인 결재 시스템(키오스크)으로 운영중인 것이다.

[표 3-23] 프랜차이즈 형태별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사용 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운영형태별	프랜차이즈	3.7	4.2	6.9
	비프랜차이즈	0.4	0.8	1.7

자료 : (통계청, 2021) 연구자 재편집

[그림 3-22] 프랜차이즈 형태별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사용 증감율



자료 : (통계청, 2021) 연구자 재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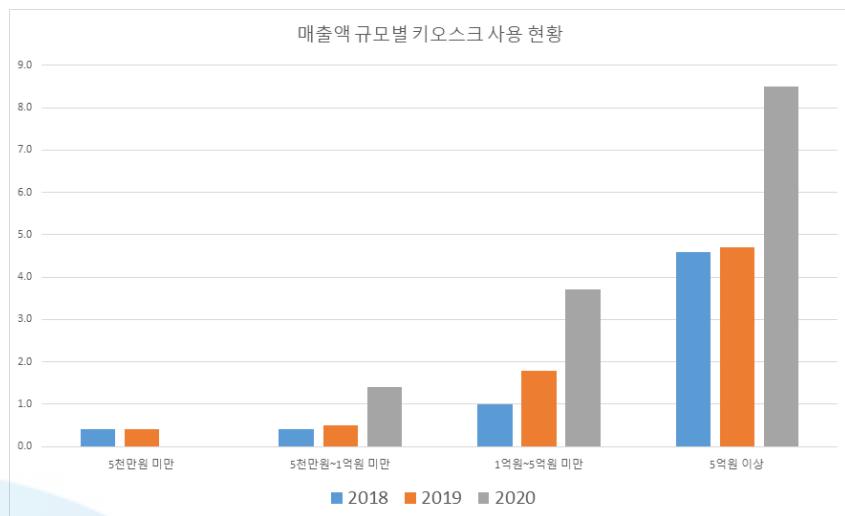
가맹사업을 하는 프랜차이즈의 경우 사업 아이템을 초기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개발하여 가맹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가맹점 모집을 하고 있다. 이는 신규 창업자의 NEEDS가 반영되었다 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아이템으로 볼 때 2018년 3.7%였으나 2020년 6.9%로 거의 2배 가까이 무인 결재시스템(키오스크)을 사업 키워드로 사용하고 있다.

[표 3-24] 매출액 규모별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사용 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매출액 규모별	5천만원 미만	0.4	0.4
	5천만원~1억원 미만	0.4	0.5
	1억원~5억원 미만	1.0	1.8
	5억원 이상	4.6	4.7

자료 : (통계청, 2021) 연구자 재편집

[그림 3-23] 매출액 규모별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사용 증감율



[그림 3-23]에서 2018~2020년 외식업 분야 운영에 대한 무인 결제시스템(키오스크)의 사용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매출액이 높은 경우 키오스크 사용이 오히려 높아짐을 알 수 있다.

2) 무인 로봇 서빙 시스템의 발달 및 활용

로봇이 노동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구인정보자료 연구보고서를 통해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부문에서 직종별로는 단순 반복적 직종에서 로봇 도입 증가 시 노동 수요가 유의하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로봇 1대 단위로 환산하면, 근로자 1천명당 로봇 1대 도입 시 단순 반복적 직종 구인 인원 증가율은 2.8%포인트, 제조업 구인 인원 증가율은 2.9%포인트 각각 하락한다고 볼 수 있다(한겨레, 2021).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근로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 대수를 나타내는 로봇 밀집도가 774대로 싱가포르(831대)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한국은행, 김혜진, 2021).

고정밀도 레이저 센서를 탑재한 무선 로봇이 무인 카페에서 커피 제조, 디저트 서빙, 음식점 메뉴 전달 등 다양한 형태의 무인 로봇 시스템이 증가하고 있다. 뛰어난 감지 능력으로 튀어나오는 어린아이와 충돌을 방지하고, 장애물을 회피한다. 인력 절감과 함께 주문, 서빙 실수가 없어서 고객 불만족을 줄여 직원 역할에 충실히다.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하는 것이다.



3.2 최저임금의 정책 개선 제언

3.2.1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문제점

지난 10년 연도별 최저임금액 살펴보면, 2017년도 8월 4일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로 역대 최고 상승률로 기록되었으며, 2018년도에는 8,350원으로 10.9% 인상률을 보여줌으로써, 최저임금 1만원 대선 공략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급여를 받는 모든 근로자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책정이 되는데 급격한 임금의 인상은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고용자 입장에서는 임금 지불에 대한 부담이 커져 부정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노·사간의 양쪽 측면의 입장을 고려하여 적절한 협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하지만 노·사간의 협상은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협상을 통하여 결정된 결과가 실제 노·사간의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도출된 결과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효율성이 저하된다. 또한 최종 제시안과 결정 조율 기간의 차이는 2018년도 협의 과정과 같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최초 인상안 제시 금액이 비현실적으로 큰 폭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2000년도부터 노·사의 제시안의 차이는 노동계의 경우 연평균 25.6%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22년 최저임금 결정에서는 근로자 위원(최초 10,320 원-18.3% 인상)과 사용자 위원(최초 8,810원-1.0% 인상)의 의견이 크게 달라 결국 공익측의 제시안(9,160원-5.05% 인상)으로 총 27명 중 찬성 13명과 기권 10명으로 가결되었다. 결국 매년 노·사간의 이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3.2.2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선방안

소상공인에게 있어 최저임금제는 사용자 측면에서 매우 큰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자료를 참고하기 보다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지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표는 향후 최저임금을 협상할 시 노·사간의 제시안을 살펴보고 격차를 좁히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로써 활용될 것이라고 판단되며, 더 나아가 나라의 기준을 설계함으로써 국가의 GDP를 향상시킬 배경이 될 수 있다. 현재 최저임금의 결정 방식은 노·사간의 협상으로 이뤄지고 있어, 노·사간의 제시한 임금의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제시한 임금의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된다면 노·사간의 불필요한 대립을 줄여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할 수 있다.

타당성 있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결정 기준을 제공해야만 한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현행법정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노·사간의 이견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책정은 현행법상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경제 발전의 효과 및 고용, 임금 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해당 사업장의 임금을 지불 할 수 있는 여건과 경쟁력, 경제 상황 그리고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까지 복합적인 조건들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포함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법정 최저임금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다양한 요인들 중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최저임금의 기준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가 경쟁 개발의 발판 마련에 매우 큰 영향력을 준다.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노·사간의 협의만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선진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

OECD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주요국은 생계비등 기본적인 사항 이외에 고용, 경제적, 사회적 영향,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자국 기준에만 고려한 것은 아니며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국내의 상황 및 조건과 관련하여

가능하다면 유동적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토록 하고 있다.

- 1) 국가의 해당연도 일반적인 임금 수준, 물가, 사회보장 급여 및 상대적인 생활 수준,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 및 근로자의 가정의 생활이 반영되어야 한다.
- 2) 생산성 수준, 경제 개발의 필요성 및 높은 비율의 고용을 이루고 유지함이 효율적이라는 경제적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ILO협약 제131조 제3조).
- 3) 사업 분야별 적정 수익성 및 노동력을 계산하여 적정 임금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몇 개의 산업에 특례 업종으로 지정하였으나 이런 방식보다는 각 산업별로 별도의 최저임금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 4) 또 다른 방법으로는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참여하고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결정 과정에서 노·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노·사정 대화 기구 등과 협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노·사간의 대립을 최소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노·사간의 위원회 방식을 통한 최저임금 결정을 택하기보다는 정부가 직접 결정하여 정부의 권한을 높이고 국민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 보인다.

현행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하면 부처 간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현행 위원회 방식은 공익 위원의 역할을 높여서 정부가 선임하는 공익위원은 결국 정부의 영향을 받게 되는 구조가 된다. 최저임금 결정에 공익 위원이 주체가 되면, 공익 위원의 성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공익 위원 선임은 정부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실질적으로 정부 의사에 따라 최저임금을 선택하게 되며, 불필요한 위원회 운영을 지양하고 정부의 책임으로써 간소화 시킬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현 정부가 최저임금안에 대해 철저히 주변 환경들을 고려하여 노·사 단체의 의견들을 들어줌으로써 결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다. 만약 정부의 개입이 아닌, 현 위원회의 합의를 통한 방식을 유지할 경우 최저임금 결정의 절차 및 방식에 개선은 고려해봐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현 결정 절차를 검토해 봤을 때 노·사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가 이를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먼저 공익 위원을 경제 부처 담당자로 구성하고 최저임금 결정 구조도 공익 위원(정부)이 안을 제시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게 되면, 보다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현 상황을 보다 잘 반영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학계 위주의 공익 위원을 경제 부처 관련자로 선임하며 각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또한 불필요한 노·사 협상 과정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보이고 있다. 현재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노동부가 특별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참여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는 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3개 부처를 포함하면 경제 관련 부처가 적극 참여하여 공익위원회가 법정 결정기준을 토대로 인상안을 제시하고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으로 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공익 위원이 안을 제시할 경우 노·사간의 불필요한 시간 소모 및 이견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V. 결 론

4.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3D 업종으로 인식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외식기업의 경영 실태를 점검하고 창업 후 경영란으로 인해 폐업으로 이어지는 현실에 대해 영업실적 하락과 구인란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그러한 원인 중에 하나로 관련 단체 등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원인으로 제시하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별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인상이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2019년 하반기까지의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최저임금인상이 소상공인과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최저임금인상의 핵심 쟁점은 얼마나 많은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노동자나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긍정적 요소로만 작용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정부의 주도적인 정책 발효는 경제주체자로서의 최초 최저임금의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입장은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가에 대해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국가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경제 발전의 성장 동력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 사업체가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사회적 및 정책적 문제점과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소상공인들은 자영업 또는 5인 미만 소규모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제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높은 것이 상황이다. 경제 활성을 위한 관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기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 그에 타당한 체계적이고 업종 및 기술적 근로자별 임금 설계 조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은 소상공인으로써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운용 자금난을 초래하여 생존력에 위협을 느끼게 된다. 국가에서 80%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점을 고려하면, 그 영향력은 극대화 될 것이라는 관점이다. 소상공인은 국가의 근로자와 연계된 가장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안의 갈등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연구 과정에서 도출된 것처럼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복지

혜택은 많은 상황에서 성공적인 결과와 이에 대한 만족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기초 경제의 주역인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은 매출 이익의 하락으로 폐업을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다가가고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한 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빈익빈 부익부와 같은 양극화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경쟁력은 갖추지 못한 생계형 계층은 더욱 더 증가한다. 물론 경제 구조상 과포화 상태인 소상공인 사업체이지만 시장 경제 자체의 자연 경쟁에 대한 폐업이 아닌 정부 정책으로 인한 과도한 정책 운영으로 인해 소상공인 사업체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다른 역차별 정책으로 인해 사업 주체인 소상공인의 사업자의 저신용자 생산이 급증할 수도 있다.

셋째, 국가 발전과 유지 운영을 위한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소상공인이 살아남기 위해 사업자와 근로자의 상황이 동시에 고려된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어야 한다. 현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선 방향을 고려하면, 통상 임금과 최저임금이 모두 임금에 관련된 사전 확정성 또는 소정 근로의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 등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의 임금 범위의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단, 법정근로시간 내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여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정책적 관점에서 고려하지 않고 사업 아이템에 따른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도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영세 소상공인 중 외식업체에 대한 최저임금의 영향력은 크게 작용되고 있다. 타 업종 대비 장시간의 영업시간, 낮은 수익성, 노동력 위주의 업무, 자금 및 규모의 열악함, 업종별 과열 경쟁, 구인란 등 타 업종에 비해 어려운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업별로 각 사업 환경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적정한 임금의 도출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의한 국가 경제 불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영향력은 각 계층에서 논쟁이 심화되는 만큼 개선의 의지가 요구된다.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의 최저임금 정책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상생의

최저임금 정책이 시행이 꼭 필요하다. 본 연구자료는 현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발생되는 소상공인들의 현황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초자료로써 활용되는 것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4.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최저임금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통계 DATA 분석을 통하여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차기 더 발전된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번 연구는 각 공공기관에서 제시한 DATA를 각색하여 소상공인 중 외식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향후에는 실제 운영 중인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환경을 좀 더 세부적인 점검을 통해 연구를 하고자 한다.

둘째. 이번 연구는 최저임금 제도만을 단일 조건으로 비교하였으나 사회적, 정치적 환경 조건에 대한 원인을 함께 비교하여 최저임금정책의 심화된 영향력을 연구하고자 한다.

(예시 : 2014년 세월호 사건, 코로나 19 경제등의 사회적 환경이 최저임금에 주는 영향 등)

셋째, 현재 국내의 최저임금은 단일 최저임금액으로 각 업종별, 지역별 등 사업 및 지역에 따른 경영 환경을 점검하고 최저임금의 적정한 차등 시행에 대해 연구 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참고 문헌

- 강승복. (2015).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 산업 연관표를 활용한 분석
- 강승복. 박철성. (2015)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분석
- 김민성. 박태수. (2013). 최저임금 변화가 지역 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 김영민. (2016). 한국의 최저임금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김유선. (2014).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2015). 최저임금 적정수준과 고용효과
- 김유성. (2006). 노동법1 – 법적근로관계법, 법문사
- 박귀천. (2016)독일 최저임금법의 제정의 배경과 의의
- 박기성. (2016). 가파른 최저임금인상: 고용재앙
- 박종규. (2013).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임금 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 한국금융연구원
- 성민제. (2014). 제5장 최저임금과 임금 불평등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0). 경기동향조사 통계정보 보고서
- 오상봉. (2015).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기업의 원가 부담 증가
- 유영성. (2018). 최저임금 인상,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 정길채. (2018)
- 이승욱. (2018)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 통상임금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이시균. (2007).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 이양우 (2019). 외식기업 경영자의 거래적 리더십과 훌서비스권한위임이 서비 스품질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이정아.(2014). 한국최저임금제 연구
- 이철수. (2014) 통상임금 관련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평가
- 최동락. (2012).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이 소상공인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최저임금위원회, (2020). 최저임금 심의 편람

최저임금위원회. (2019).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
최저임금위원회. (2017).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최지연. (2013).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통계청. (2019, 2020). 국민 삶의 질 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2014). 자영업 고용 구조와 실태
한국외식산업 연구원. (2020). 한국외식산업통계연감
홍순창. (2016). 소상공인 경제활동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헤럴드 경제. (2016). 고용대란에 생계형 창업급증, 성공률 낮아 다시 벼랑

2. 관련 사이트

고용노동부. (moel.go.kr)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최저임금위원회. (minimumwage.go.kr)
통계청. (kostat.go.kr)
통계개발원. (kostat.go.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bok.or.kr)
e-나라지표. index.go.kr
TASIS 국제통계포털. (nts.go.kr)

ABSTRACT

A Study on the Impact of Minimum Wage Increase on Small Business Environment

– A Study on the Foodservice Industry of Small Business –

Choi, Young-chae

Major in Smart Convergence Consulting

Dept. of Smart Convergence Consulting

Graduate School of Knowledge Service Consulting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being discussed in various fields due to the recent sluggish management of small business owners and the high closing rate of self-employed people, but the low return of small business owners, excessive working hours, and high inflation rates are emerging. In addition, although it is affected by COVID-19, the issue of overheated competition due to the high proportion of self-employed people in the existing start-up market, competition with large stores, and rising raw material costs are frequently dealt with in the media. Among them, the actual operating employer's opinion as the most common problem is worker wages, and the minimum wage is a realistic problem in the self-employed field. The rate of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which

expects a happy life for workers due to an increase in workers' income, has a dual result in both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In particular, the labor costs of employees, which are located in a very important position in the self-employed economy, face difficulties for small business owners and businesses, operate as single-person operators, and polarization due to this decreasing employment rate becomes clear. In the end, on May 21, 2019,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eld a "minimum wage impact analysis debate" and published an official study result that the minimum wage increase resulted in employment reduction, wage restructuring, and working hours reduction.

In this way, low-wage workers who are most affected by the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and small business owners who are self-employed. Currently, low-wage workers account for more than 20% of all workers in the Korean economy, and most of them are economically very vulnerable. This is a small business owner with a high share of 77% of SMEs with less than five employees. They have faced management limitations even before the minimum wage hike. The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itself due to livelihood projects, such as low productivity compared to high labor volume, inefficient transactions with large companies, overheated competition with similar companies, income imbalance among self-employed people, and low-cost product sales due to perception of economic recession, is another proble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ablish an efficient government-led minimum wage policy currently being implemented by each government agency and to establish a minimum wage policy suitable for the reality of small business owners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small business owners. In particular, small business owners are inevitably worried about the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in management, which has a high proportion of the national economy and growth engines.

The reality is that most small business owners in Korea operate on a small scale, and the impact on economic labor cost from the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is very high. In order to revitalize the economy of self-employed people, it is judged that systematic coordination of government policies and appropriate systematic wages is very urgent.

In addition, unlike large companies and SMEs, the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intensifies polarization among self-employed people with less than one or five employees, further increasing the number of people who have difficulty in economic independence. Small self-employed people feel difficult to operate their businesses due to lack of time and employment to accommodate frequently changing national policies due to their own labor input, and the government's appropriate policy needs to be supplemented.

For national development and operation, the survival of small business owners is an important basis for the Korean civic economy. The independent economic activity of small business owners is a very important part, and an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in consideration of the situation of small business owners and workers should be determined to revitalize small businesses. The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in consideration of the management reality of small business owners must guarantee the minimum wage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of self-employed people in consideration of the ratio of cost expenditure resulting from business management of small business owners. As a result, the management deterioration of small business owners should no longer proceed and improve due to the unilateral creation of a leading industrial structure, and government support policies are essential to alleviate problems affecting small business owners.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mpletely solve the problem only with the results so far, and research related to this will have to continue in the future.

[Key words] Minimum wage, minimum wage increase rate, small business management structure, restaurant business management, government support, restaurant industry structure, BOTG

